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저 자 권오철, 금창호

연구책임자 **권오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진 **금창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및 체계

○ 충북도의 인구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인구문제와 관련된 교육, 데이터허브, 거버넌스관리를 추진할 전담연구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 설치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체계



2. 인구연구센터 설치의 필요성

환경조건	기대역할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1) 충북지역 인구문제의 영향 지속적 심화	문제특성과 이에 대한 솔루션 도출, 정책지원을 위한 적정 통계자료의 생산, 활용, 제공, 인구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및 정책플랫폼 역할	① 인구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및 관리 필요
		②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민간 대응 네트워크 마련 필요
		③ 인구문제의 다차원적 특성에 따른 학제적 대응 필요
		④ 인구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선제적 검토 필요
(2) 인구문제에 대한 충북도 및 중앙정부 정책 확대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자문, 정책 내실화 지원, 정책분석 및 평가지원 역할	⑤ 충북형 인구정책개발 기본체계 마련 및 체계적 관리/지원시스템 필요
		⑥ 인구정책 개발의 사전영향평가의 중요성 확대
		⑦ 충북도, 시/군 인구정책의 중첩/갈등요인 최소화 및 상생적 협력방안 연구 필요

3. 사례분석

○ 분석대상: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 연구센터,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 사례분석 비교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목적	핵심	인구정책네트워크 플랫폼	인구감소지역 대응	인구영향평가
	기타	인구계획 등 자문 지역인구통계 생산 관련전문가 네트워크 (학술행사 포함) 인구교육 인구감소대응 컨설팅 (인구영향평가 ×)	인구계획 등 자문 지역인구통계 생산 관련전문가 네트워크 (학술행사 포함) 인구교육 인구감소대응 컨설팅 (인구영향평가 ×)	인구계획 등 자문 지역인구통계 생산 관련전문가 네트워크 (학술행사 포함) 인구교육 (인구감소대응 준비)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	방식	연구원 자체설립	연구원 자체설립	부산시 위탁
	근거		-	- 부산시 인구정책기본조례 -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센터 설립 명시)
운영	조직 인력	센터장 운영지원1 * 겸직	센터장 연구위원2 전문위원1 위촉연구위원2 * 위촉연구위원외 겸직	센터장 연구위원2(계약직) * 연구원 전임
		원내 워킹그룹 7 * 조직구성원 포함 * 저출산고령화, 섬/도서 지역활성화, 인구통계, 청년정책, 도시공간설계 등 전공	원내 컨설팅단 9 * 조직구성원 포함 * 원내 각 전공분야	원내자문위원 2 * 도시공학, 사회학
	예산	연간 2천만원 내외 * 개별 자문/컨설팅비	경북도 보조사업비용 (약 4억원)을 센터운영과 연계	1억 1200만원 (대부분 2인 인건비)
강점 / 향후 과제	강점	-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 정책협의회 운영 등 - 인구관련 사업 다양화 등 확정성 ↑	- 경북도와의 보조사업 (용역)을 통해 관련 자원 확보 - 인구감소관련 체계적 대응(계획수립, 진단, 컨설팅, 평가 등)	규모 작으나 안정적 운영 (5년 단위 계약)
	향후 과제	전담인력 × (소장1인 대응) 예산 한계 원장, 센터장 바뀔 경우 지속성 문제 발생	핵심업무외 하반기 추진 계획(업무량에 따라 유동적) 보조사업(용역) 확보 여부에 따른 연도별 편차 큼	핵심사업외 여타업무 수행 어려움(대부분 센터장 대응, 계약직 2인은 인구영향평가 전담)
		- 일정 부분 도와 인구관련 사업계약을 통해 자원 및 전담인력 확보 필요	- 적정 전담인력 확보 통해 사업간 균형적, 안정적 추진 필요 -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기능/정책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시군의 경우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 제각각, 위기의식 제한적)	- 자원 확보위해 사업확대 검토(인구감소지역 지원 기금 확보)

○ 성과 및 시사점

성과	관련 사항
<p>① 인구나업 공무원 및 단체관계자의 지역인구문제 인식 및 대응체계 공유</p>	<p>- (기존) 공무원과 관련단체, 공무원간에도 시/도 본청과 시/군/구 인구나업담당 공무원간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차가 크고, 인구정책 및 사업개발에 대한 이해도 제각각</p> <p>- (대응) 정책협업회의 운영(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p> <p>* 구성: 공무원(광주/전남, 시/군/구 인구나업관련부서 담당), 관련 단체(광주여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일가정양립본부, 복지재단 등) 약 60여명</p> <p>* 운영: 연 2회 개최 정례화</p> <p>* 성과: 인구문제/정책관련 특강/토론,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인구 문제/사업개발에 대한 공동의 방향성 정립, 인구나업개발 정보 등의 상호교류 및 상호이해 확대, 인구문제 대응의 정기적 공공네트워크 구축 등</p>
<p>② 지역의 인구문제, 대응정책 등에 대한 주민홍보 확대, 자치단체 인구정책 정당성 제고</p>	<p>- (기존) 지역사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구전문가 부재 → 지역뉴스 매체의 인구관련 언론 보도 극소수 → 인구문제나 정책 홍보 한계</p> <p>- (대응) 인구연구센터장의 언론 인터뷰, 외부 세미나 발표 등 (3개 센터)</p> <p>* 상황: 지역뉴스매체에서 인구관련 주요 이슈 발생시마다 지역인구 문제 전문가로서 인구연구센터장 인터뷰, 인구관련 세미나/토론회 주요 참석자로서 인구정책 발표/토론 등</p> <p>* 성과: (주민측면) 인구연구센터 운영이후 지역인구쟁점에 대한 지역 뉴스매체 인터뷰 전문가 대응, 관련 세미나.토론회 정책발표 등을 통해 주민의 인구문제 관심도 제고(예: 지역뉴스매체에서 인구문제 보도 확대: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의 경우 설립 이후 1년간 10여차례 이상 인터뷰 및 활동 보도 → 지역인구문제에 대한 이슈 제기와 전문가 대응 일상화)</p> <p>(자치단체측면) 전문성 권위(인구연구센터 센터장)으로서 자치단체 인구정책 및 사업추진 정당성 강화 등</p>
<p>③ 도 및 시/군에 대한 상시적, 즉각적 자문/컨설팅 가능</p>	<p>- (기존) 인구정책 수립 및 사업개발시 도, 시/군 관련사업부서별로 전문가 탐색, 자문 요청</p> <p>- (대응)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팀 구성(3개 센터)</p> <p>* 구성: 연구원 내 전문가를 겸직으로 하여 도, 시/군 자문/컨설팅 요청에 즉시 대응(부산연구원 원내자문단, 광주전남연구원 원내 워킹그룹, 경북연구원 시군별 지방소멸대응컨설팅팀 구성)</p> <p>* 운영: 연구원내 전문가 활용(겸직), 상시 대응</p> <p>* 성과: 도, 시/군의 인구문제관련 자문/컨설팅 일원화에 의한 즉시적 전문가 매칭을 통한 대응력 향상</p>

4.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 타당성분석

○ 정책타당성분석 결과 종합

	구분	주요분석자료	타당성 평가
정책 추진 일관성	(1) 상위 정책 연계	- 충북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1-2025) -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2023) 등	- 인구정책 관련 상위추진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연구 및 인구정책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제기 - 상위정책을 통하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인구정책담당관실)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가칭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유기적 협업관계 필수적 → 상위정책 연계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매우 높음
	(2) 사업 추진 의지	- 단체장의 인구문제 의지 표명(언론보도) - 단체장 인구문제해결 의지 실천(관련 조직 및 정책) 등	- 인구정책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직접적 의지표명을 없지만,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하여 충북도정의 제1목표를 인구정책에 두고 지속적인 의지표명과 대응조치 추진 • 이와 같은 인구정책 추진은 인구문제의 특성상 계획단계 부터, 진행, 평가 등 전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이 필수 - 정책의 확대와 인구문제의 연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에 있어 체계적/다분야적 전문가 참여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견 • 또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 추진전략 등의 승인을 통하여 인구정책연구센터 필요성에 대한 의지 유추 가능 → 사업추진 의지(단체장)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높음
	(3) 관련 사례	- 3개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자료	- 2020년 전후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적 이슈가 심화되면서 광역단체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 움직임(광주전남연구원, 경북연구원) • 이후 인구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 증가와 함께 광역단체 주도의 연구센터 설치(부산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현재 설립 추진중) - 연구기관 자체설치의 경우도 지역소멸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광역단체 지원 확대를 통하여 연계 강화(경북도의 경북연구원 보조사업 확대) - 충북도의 경우도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지원기능을 선도적/ 적극적으로 검토, 충북도와 상시적 정책지원/협업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정책연구센터 필요 → 관련사례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매우 높음

	구분	주요분석자료	타당성 평가
	법적 근거	- 관련 법령(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구정책 관련사업 및 위탁 사항 구체화 → 법적근거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매우 높음
정책 추진 안정성	예산	- 인구정책사업 예산 (충북도 100대 세부 추진과제 시행 예산) -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등	- 연평균 2,700억 원의 인구정책사업 수행 • 인구정책의 기본체계 마련, 조정, 진행과정 관리 및 성과 평가, 피드백 등 총괄적 정책지원조직 운영 필수 - 인구정책연구센터 운영비(예산) ※ 관련 사례 연구센터 예산(1,500만 원 내외 ~ 1억 1,200만 원) • 상시사업: 인건비(최대 3인), 운영 및 사업비 포함 시: 2억 원 내외 • 수시사업: 겸직(각 분야별 전문가 5~8인 규모) : 컨설팅, 자문비용으로 총당 가능 → 예산사용 및 확보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 높음
	사무	- 법령 명시 사업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 3개 유사사례 인구 연구센터 수행사무 - 충북연구원 인구관련 연구수행과제 등	- 법령 명시사업과 함께 단기/중장기적으로 수행 필요한 인구 정책 연구사업 확대 불가피 • 인구정책 관련 사무 지속 확대 •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업무 과부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및 직접/협업수행체계 명확화 필요 → 사무적 측면에서 타당성 매우 높음

5.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의 설치 및 활용방안

○ 설치방향

- 단기적 대응
 - ▶ 제1안: 위탁 설치안
 - ▶ 제2안: 관련기관 자체설치 협조의뢰안
- 중장기적 대응: 직접 설립안(인구관련 연구센터를 재단법인 형태 설립)

○ 대안비교(단기적 대응안)

		위탁설치방안	자체설치방안	비고
설립 과정	법적 근거	현 조례 근거	-	
	설립 절차	의회 심의 민간위탁 절차	-	
조직 운영	역할 / 기능	(역할) - 충북도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지원 - 충북도 인구관련 데이터 허브 및 민관네트워크 구축·관리 (기능) - 출산/육아, 인구유입 등 인구증가 사업 - 정주여건 개선사업 -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 인구관련 포럼 운영 - 인구관련 홍보·교육 사업 등	동일	계약비용 및 협의를과정을 통해 조정
	조직 / 인력	센터장 아래 2개 팀 구성 - 인구문제대응팀 - 인구정책지원팀 - 인구정책대응팀: 계약직(상근) - 인구정책지원팀: 겸직(비상근)	동일	자체설치의 경우도 관련 보조사업(용역) 수행시 전임직 확보 가능
	예산 조치	위탁비용 (※ 위탁비용은 인건비 + 위탁사업 운영비)	별도 없음 (※ 관련 보조사업(용역) 계약을 통하여 간접적 지원 검토 필요)	
기타 (설치가능기관)		공공연구기관 대학/민간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 단기적 대안간 필수적 수행역할 장단점 비교

	위탁설치(제1안)		자체설치(제2안)
	1-a (공공연구기관)	1-b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학제적 접근	-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구성원 확보(겸직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 부담없이, 겸직구성원 간 강한 연계성 확보 가능)	- 대학의 경우 학제적 연구를 위한 구성원 확보 가능(겸직 활동에 대한 비용부담 발생, 겸직구성원간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민간연구기관의 경우 구성원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 특성	-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구성원 확보(겸직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 부담없이, 겸직구성원간 강한 연계성 확보 가능)
정책 플랫폼	- 운영가능(예산범위내)	- 운영가능(예산범위내)	- 민관네트워크, 정책민간참여 일정부분 가능(예산확보 문제 등)
데이터 관리	- 체계적인 데이터 생산, 데이터 및 자료의 관리 가능(관련 연구의 축적,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용이)	- 체계적 데이터 생산, 자료 관리 상대적 제한(관련 연구 단편적, 조직규모상 데이터/자료의 체계적/안정관 관리, 활용 제한적)	- 체계적 데이터관리의 책임성 상대적 저하(상근구성원 부재, 데이터 생산, 자료관리 등 업무부여 불가)
상시적 협력	- 상시적 협력 상대적 우위 (충복도는 업무부여 및 비용 부담 위치, 공적 업무관계 유지 하면서 업무 융통적 운영 가능) - 상근직원에 의한 즉시적 대응 (자문의뢰기관과 전문가 연계), 해당 전문가 부재시 대안모색 제공 등	- 상시적 협력 상대적으로 제한 (충복도는 업무부여 및 비용 부담으로 공적 업무관계를 가지지만, 계약범위내 한정적) - 상근직원에 의한 즉시적 대응 (자문의뢰기관과 전문가 연계), 해당 전문가 부재시 대안모색 제공 등	- 상시적 협력 상대적으로 제한 (공공연구기관 자체설치로 충복도는 협조의뢰 위치)

○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활용방안

구분	활용방안	
센터-도/시군 관계에서의 활용	▶ 정책지원역할	-도 인구계획 및 인구정책 수립 지원
	▶ 인구문제인식, 인구사업 개발의 기본틀 개발 및 확산 역할	-인구문제, 인구사업개발에 대한 기본틀 개발 - (가칭)인구정책협의회(도/시군의 인구계획/인구사업 관련부서 팀장급 이상) 구성 및 정기적 워크숍을 주관하여 관련 공무원간 문제인식 및 사업개발방향의 공감대 형성
	▶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적 자문-컨설팅 역할	-인구연구센터내 인구정책지원팀(전문가협업팀) 구성을 통하여 도/시군의 인구사업 관련부서의 현안 문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컨설팅 제공
센터-도민 관계에서의 활용	▶ 인구문제/정책의 홍보 역할	- 언론 인터뷰(충북도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 제공, 인구쟁점 전문가 의견 등)를 통하여 도민의 인구문제 관심 지속적 제고 - 인구문제 및 정책대응 홍보자료 제작
	▶ 인구문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역할	- 초중등학교 특별교육(교육청 협업), 대학생 교양강좌 특강(관내 대학 협업) - 인구문제대응 시민강좌 개설
센터-전문가/ 시민집단 관계에서의 활용	▶ 인구문제에 대한 쟁점 선도 역할	- 인구관련 포럼 운영을 통하여 선도적 쟁점 개발 및 대응 - 인구관련 학술대회, 워크숍 등의 주관 및 참여를 통해 인구문제 관련 쟁점의 논의, 충북도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논의 및 피드백 등
	▶ 충북도 인구관련 연구 데이터 허브 역할	- 충북도 인구특성을 반영한 인구지표 개발 - 관련 통계, 정책자료, 해외사례 등의 수집 및 제공 - 인구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

목 차

제1장 |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체계 및 방법	5

제2장 | 충북 인구문제 대응실태 및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필요성

제1절 인구실태 및 인구정책	9
1. 인구실태	9
2. 인구정책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18
제2절 지역단위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필요성	26
1. 설립 필요환경	26
2. 설립 필요성	27

제3장 | 인구연구센터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

제1절 시·도별 인구전담부서 및 연구센터 운영현황	41
제2절 인구연구센터 사례분석	43
1. 사례분석의 틀	43
2. 사례분석	43
3. 비교 및 시사점	50

제 4 장 |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 타당성분석

제1절 타당성분석모형	57
제2절 타당성분석	60
1. 타당성분석방법 및 평가기준	60
2. 타당성분석	61

제 5 장 |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의 설치 및 활용방안

제1절 설치방향	83
제2절 설치방안	85
1. 단기적 설치방안	85
2. 중장기적 설치방향	92
제3절 활용방안	93

【참고문헌】	95
---------------------	-----------

【부록】	97
-------------------	-----------

부록 1.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97
부록 2.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운영규칙(안)	101
부록 3.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102

표 목차

[표 2-1] 시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1
[표 2-2] 인구의 자연증감율(2022)	12
[표 2-3] 시도별 고령화율(2022) 및 장래추계	13
[표 2-4] 충북 100대 인구정책과제	21
[표 2-5] 충북도의 인구정책추진체계	25
[표 2-6]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의 환경조건과 설립필요성	26
[표 2-7] 인구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29
[표 2-8] 인구관련연구의 학제적 접근(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31
[표 2-9] 중앙정부의 지역소멸 대응방안	32
[표 2-10]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과 인구정책의 분류방식	34
[표 2-11] 인구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언론기사(예)	35
[표 2-12] 인구사업의 시·군간 중복/갈등 사례	37
[표 3-1] 시도별 인구전담부서 및 인구연구센터	42
[표 3-2]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구성원 역할분담(전문분야)	45
[표 3-3]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구성원 역할분담(전문분야)	47
[표 3-4]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구성원 역할분담(전문분야)	49
[표 3-5] 사례분석을 통한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의 주요 성과	52
[표 3-6] 도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시사점)	53
[표 4-1] 정책타당성 분석항목(1): 기획재정부	58
[표 4-2] 정책타당성 분석항목(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8
[표 4-3] 정책타당성 분석모형(안)	59
[표 4-4] 타당성분석방법	60
[표 4-5] 타당성 평가 기준	61
[표 4-6] 충북의 성공적 인구정책을 위한 혁신방안(안)	63

[표 4-7] 민선8기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64
[표 4-8] 단체장의 인구문제관련 의지표명 사례1(언론보도)	66
[표 4-9] 단체장의 인구문제관련 의지표명 사례2(언론보도)	67
[표 4-10] 충북 인구정책조례의 사업위탁 근거	71
[표 4-11] 충북 인구정책 추진예산	73
[표 4-12] 충북 인구정책 기본조례상 정책지원가능 업무	74
[표 4-13] 충북 인구전담부서(인구정책담당관) 업무의 정책지원 관련성	76
[표 4-14] 충북연구원 인구관련 연구과제 수행실적(2013~2022)	78
[표 4-15] 타당성 분석결과 종합	79
[표 5-1] 인구연구센터 설치시 필수역할 검토사항	84
[표 5-2] 위탁설치 근거규정(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85
[표 5-3]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분장업무 및 인력구성(안)	87
[표 5-4] 단기적 대안간 설립과정, 조직관리 비교	90
[표 5-5] 단기적 대안간 필수적 수행역할 장단점 비교	91
[표 5-6] 관계적 측면에서의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활용방안	9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체계	6
[그림 2-1] 충북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10
[그림 2-2] 충북지역 인구 피라미드 변화	14
[그림 2-3] 시도의 지역 간 순이동율과 연령별 순이동율	15
[그림 2-4] 충북지역 연령별 순이동(2012-2021 비교)	16
[그림 2-5] 인구감소지역 분포현황	17
[그림 2-6] 충북 민선8기 인구정책 비전 및 목표	19
[그림 2-7] 제4기 인구정책TF 추진계획	30
[그림 5-1]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조직(안): 위탁설치	87
[그림 5-2]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조직(안): 자체설치	8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충북 인구위기 심화 및 구조적 특성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필요성 증대
 - 자연증감률: 충북도의 2022년 출생아 수 7,456명으로 전년대비 734명 감소, 합계출산율 0.95명(2021) → 0.87명(2022)으로 감소, 출생아 수 증감률 시/도에서 7위(2022) → 14위(2022)로 하락
 - 사회이동률: 2022년 유입인구 5,201명 증가, 그러나 30대 미만 연령층 1,387명 이탈(청년층 유출 심화)
 - 충북도내 인구의 자연감소와 지역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한편, 결과적으로 도내 11개 시·군중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021)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위기 확대
- 충북도의 인구정책 확대 추진 및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원/관리 필요성 확대
 - 이상과 같은 인구문제 심화에 대응하여 충북도는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구문제를 전담할 부서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인구위기대응TF 구성, 인구관련전문가자문위 설치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관련 정책 역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00개의 인구정책 세부과제에 대하여 총1조 3,7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중
 - 충북도의회 역시 인구문제 및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충청북도 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 목적),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인구 정책에 대한 사업내용 규정,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규정 신설) 등 인구위기관련 다양한 입법활동을 추진중

- 이와 함께 각 시·군단위에서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사업 중점 추진중: 제천시(‘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유치팀 설치 등), 음성군(‘내고장 음성애(愛) 주소갖기 범군민 운동’ 추진 등), 보은군(전입장려금 확대,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3년간 지원 등 추진계획, ‘인구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준비 등), 영동군(지방소멸대응추진단 구성 등), 단양군(‘단양군 인구 증가 아이디어 공모전’ 등), 옥천군(관내 충북 도립대 학생들의 주소 이전 적극 유도, 자녀 양육가정의 부담 완화와 육아환경 개선사업 등)
 - 이러한 도와 시·군의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정책개발 확대는 인구 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검토와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인구정책추진의 전문적 정책지원, 통계/데이터/연구 등 충북인구문제 허브 구축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요구
- 충북과 시/군의 인구계획 및 그에 따른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관련 통계 및 각종 데이터의 허브역할 수행을 통하여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과 정책플랫폼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의하여 충북도의 인구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인구문제와 관련된 교육, 데이터허브, 거버넌스관리를 추진할 전담연구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 설치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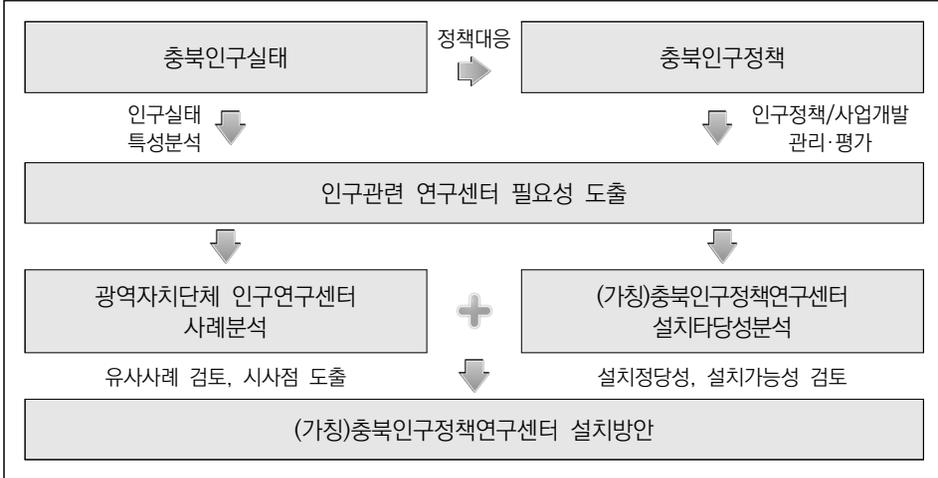
1. 연구범위

- 충북지역 인구실태 및 특징
- 지역단위(광역)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필요성
-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관련 연구센터 운영실태분석
-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분석
-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방안

2. 연구체계 및 방법

- 연구체계
 - 연구의 기본체계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충북의 인구실태와 이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현황분석을 통하여 인구관련 연구조직 설치 필요성을 도출하고,
 - 다음 인구 관련 연구조직 설치에 앞서 광역자치단체 인구관련 연구조직에 대한 사례분석과 충북도 내 인구관련 연구조직 설치의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설치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 이에 근거하여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방안을 제시함

[그림 1-1] 연구체계



○ 연구방법

- 연구는 문헌연구(충북도 내 인구정책관련 내부자료, 언론보도자료, 관련 법령, 연구자료 등)를 기본으로 하되,
- 유사단체 사례분석, 필요성 검토 등에 있어서는 문헌(자료)분석과 함께 관련 전문가(관계자) 인터뷰조사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함



제2장

충북 인구문제 대응실태 및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필요성

제1절 인구실태 및 인구정책

제2절 지역단위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필요성



- 충북의 인구실태분석 및 특징 검토를 통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제기
-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전문연구기능(연구센터)의 필요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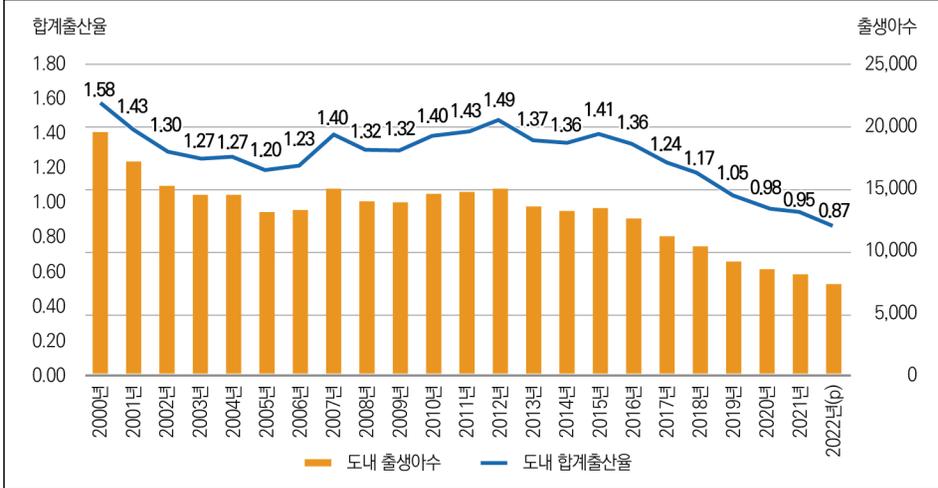
제1절 인구실태 및 인구정책

1. 인구실태

1) 인구의 자연증감 실태

- 충북의 인구실태는 인구정책연구의 토대가 되는만큼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분석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구실태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의 자연증감 실태와 지역 간 이동실태를 중심으로 살펴 봄
 - 먼저 인구의 자연증감실태는 기본지표인 자연증가율과 고령화율 검토를 통하여 인구
 - 구조의 기본 특성을 살펴보며,
 - 인구의 지역 간 이동실태는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수, 유출인구의 연령적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함
- 자연증가율과 관련하여 먼저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을 보면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0년대 들어와 반등을 거듭하다가, 2015년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1] 충북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출처: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정책담당관(2023), 민선8기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전략.

- 2022년 충북의 출생아 수는 7.5천 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87로 전국 평균 (0.78)보다는 다소 높지만 도지역 평균(0.86)과는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바, 도 지역단위 인구문제에 있어 충북 역시 기본적으로 위기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앞서 시계열 그래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이후 예외없이 해마다 출산율이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바, 위기적 특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2-1] 시도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단위: 천 명, %)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2021	2022p	증감	증감률	2021	2022p	증감률
전 국	260.6	249.0	-11.5	-4.4	0.81	0.78	-3.7
특·광역시	110.7	105.0	-5.7	-5.2	0.74	0.69	-6.3
서울	45.5	42.5	-3.0	-6.7	0.63	0.59	-5.4
부산	14.4	14.1	-0.3	-2.2	0.73	0.72	-0.7
대구	10.7	10.1	-0.5	-4.9	0.78	0.76	-3.6
인천	14.9	14.5	-0.5	-3.3	0.78	0.75	-4.1
광주	8.0	7.4	-0.5	-6.4	0.90	0.84	-5.7
대전	7.4	7.7	0.3	3.6	0.81	0.84	4.0
울산	6.1	5.4	-0.7	-11.8	0.94	0.85	-9.8
세종	3.6	3.2	-0.4	-10.2	1.28	1.12	-12.3
도 지역	149.9	144.1	-5.8	-3.9	0.94	0.86	-7.7
경기	76.1	75.3	-0.9	-1.1	0.85	0.84	-1.6
강원	7.4	7.3	-0.1	-1.1	0.98	0.97	-1.1
충북	8.2	7.5	-0.7	-9.0	0.95	0.87	-8.2
충남	11.0	10.2	-0.8	-7.0	0.96	0.91	-5.7
전북	7.5	7.0	-0.4	-6.0	0.85	0.82	-3.9
전남	8.4	7.9	-0.5	-6.3	1.02	0.97	-4.6
경북	12.0	11.3	-0.7	-6.1	0.97	0.93	-3.7
경남	15.6	14.0	-1.5	-9.9	0.90	0.84	-7.2
제주	3.7	3.6	-0.1	-3.4	0.95	0.92	-3.3

출처: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자료(2023.2.22.).

- 또한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차이 비교를 통한 자연증가율의 경우 2022년 -4.2로 전국 평균(-2.4)은 물론 도지역 평균(-2.9)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망률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보다 심층적 분석 필요성을 보여줌

[표 2-2] 인구의 자연증감율(2022)

(단위: 천 명, 인구 1천 명당 명)

	출생아 수	조출생률	사망자 수	조사망률	자연증가	자연증가율
전 국	249.0	4.9	372.8	7.3	-123.8	-2.4
특·광역시	105.0	4.7	146.2	6.5	-41.2	-1.8
서울	42.5	4.5	55.3	5.9	-12.8	-1.4
부산	14.1	4.3	27.7	8.4	-13.6	-4.1
대구	10.1	4.3	17.6	7.4	-7.4	-3.1
인천	14.5	4.9	19.0	6.5	-4.5	-1.5
광주	7.4	5.2	9.4	6.5	-1.9	-1.3
대전	7.7	5.3	9.3	6.4	-1.6	-1.1
울산	5.4	4.9	6.4	5.7	-1.0	-0.9
세종	3.2	8.5	1.7	4.4	1.5	4.1
도 지역	144.1	5.0	226.6	7.8	-82.5	-2.9
경기	75.3	5.6	79.0	5.8	-3.7	-0.3
강원	7.3	4.8	15.1	9.8	-7.8	-5.1
충북	7.5	4.7	14.1	8.9	-6.6	-4.2
충남	10.2	4.8	19.7	9.3	-9.5	-4.5
전북	7.0	4.0	17.9	10.1	-10.8	-6.1
전남	7.9	4.3	20.9	11.5	-13.0	-7.1
경북	11.3	4.3	27.8	10.7	-16.5	-6.3
경남	14.0	4.3	27.4	8.3	-13.4	-4.1
제주	3.6	5.3	4.8	7.1	-1.2	-1.8

출처: 통계청,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자료(2023.2.22.).

- 충북인구의 자연감소와 함께 또 한 가지 심각한 인구문제가 고령화율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대비하여 나타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임
 -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충북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8.8%에서 2030년 27.2%, 2040년 36.6%, 2050년 42.7%로 예측되고, 생산가능인구(15~59세)의 경우 2020년 103만명에서 2030년 92만명, 2040년 78만명으로 감소 예측

- 이러한 현상은 향후 지방행정서비스 유형과 서비스 제공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정책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임

[표 2-3] 시도별 고령화율(2022) 및 장래추계

(단위: 천 명, %, 위)

	2022			2030			2040			2050		
	고령인구 비중	순위										
전국	9,018	17.5	-	13,056	25.5	-	17,245	34.4	-	19,004	40.1	-
서울	1,616	17.2	10	2,188	24.5	10	2,728	31.9	14	2,930	37.0	15
부산	692	21.0	5	925	30.1	5	1,085	38.4	6	1,096	43.6	6
대구	426	18.0	9	594	27.0	9	741	36.7	7	760	42.1	9
인천	451	15.2	13	714	24.1	12	980	33.2	11	1,105	39.3	11
광주	223	15.2	14	319	22.8	15	424	32.0	13	462	38.1	13
대전	229	15.5	12	330	23.6	13	433	32.3	12	471	37.8	14
울산	158	14.2	16	255	24.4	11	339	35.6	10	354	41.9	10
세종	38	9.9	17	72	14.6	17	129	22.0	17	182	28.8	17
경기	1,955	14.3	15	3,152	21.9	16	4,511	30.5	16	5,220	36.4	16
강원	337	22.1	4	484	31.6	3	636	41.4	3	700	47.2	3
충북	307	18.8	7	450	27.2	8	610	36.6	8	685	42.7	8
충남	426	19.5	6	606	27.2	7	820	36.4	9	943	43.0	7
전북	398	22.4	3	523	31.0	4	656	40.9	4	698	46.8	4
전남	433	24.5	1	559	32.9	1	702	43.2	1	754	49.5	1
경북	600	22.8	2	822	32.2	2	1,040	42.6	2	1,102	48.9	2
경남	617	18.8	8	899	28.2	6	1,183	39.1	5	1,275	46.0	5
제주	112	16.5	11	163	23.1	14	229	31.9	15	268	38.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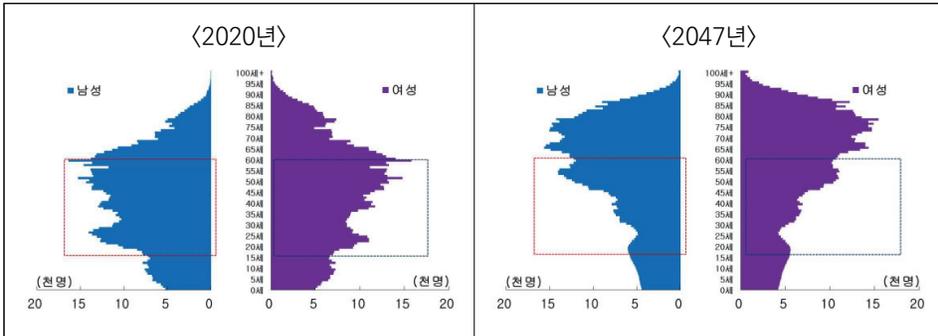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2022.9.29)

○ 아래 인구 피라미드는 자연증감과 고령화율을 토대로 2050년경 충북의 인구구조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시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구의 자연감소, 청년층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고령층의 급속한 증가 등 충북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그림 2-2] 충북지역 인구 피라미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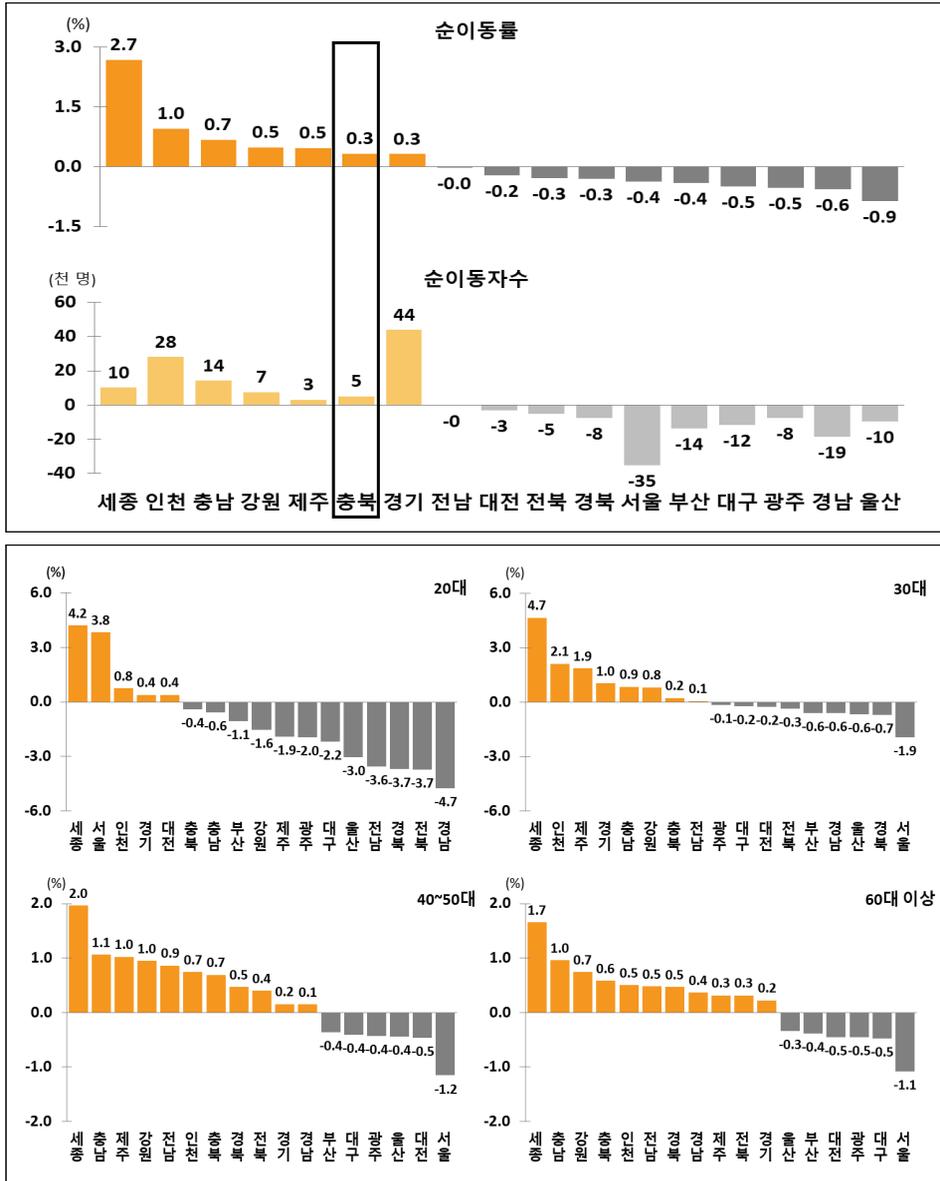
주: 1) 추계인구(1세별) 기준 2) 점선은 15~59세 구간
출처: 한국은행충북본부(2022), 충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22.1.25.)

2) 인구의 지역이동 실태

-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① 수도권의 인구유입과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②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인구유출과 경기, 인천과 같은 외곽단체의 인구유입, ③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세종과 인접한 충청, 강원권의 인구유입과 기타 지역의 인구유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충북의 경우 비수도권이면서도 수도권, 세종권과 인접하여 여타의 도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를 다소 초과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충북의 지역 간 이동 특성은 전체적으로 순유입이 순유출보다 다소 많지만, 아래 연령별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순유입이 초과한 요인은 40대 이상의 유입에 의한 것을 알 수 있는데(20대와 30대의 경우 순유출이 높거나 순유입과 유사 규모), 지역 간 인구유출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제기됨

[그림 2-3] 시도의 지역 간 순이동율과 연령별 순이동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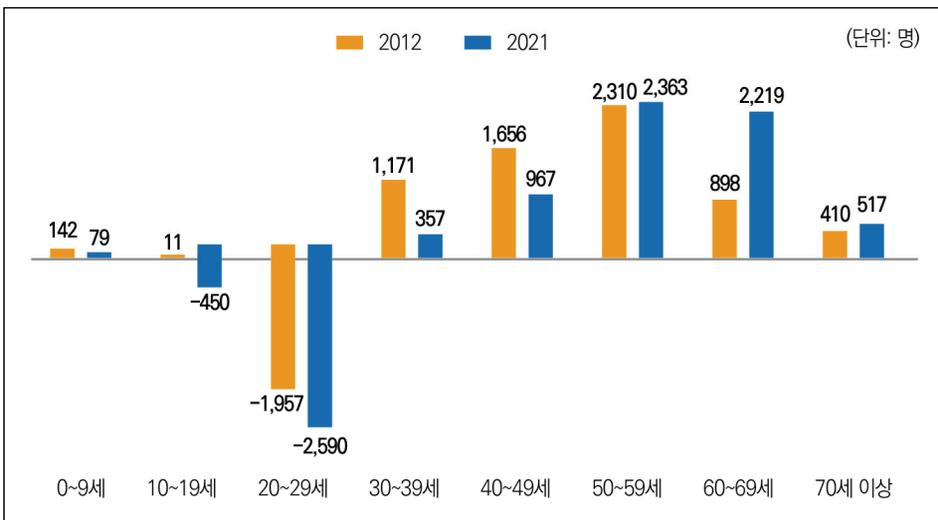
(단위: 천명)



출처: 통계청,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2023.1.30.)

○ 이상에서 제기된 충북의 지역 간 이동을 및 연령별 이동특성은 단지 2022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10여 년간 유사한 경험치(아래 충북지역의 연령별 순이동(2012-2021 비교) 그래프 참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2-4] 충북지역 연령별 순이동(2012-2021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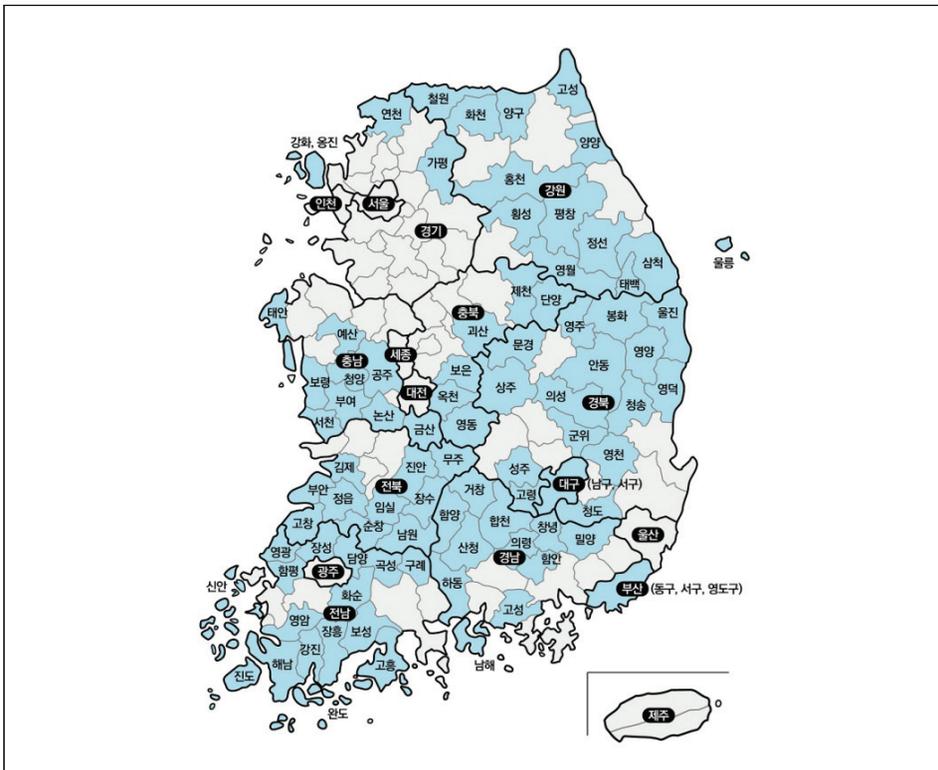
출처: 충남지방통계청(2022), 위 자료.

3) 인구실태의 주요 특징

- 인구 자연감소 → 고령화 및 경제가능인구 부족 심화
 -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충북의 경제역량 저하
 - 충북의 노동공급(노동시간 기준)은 2030년경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노동공급 증가율의 하락은 충북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0.03%p(2022~2040년 중)씩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한국은행충북본부, 2022)

- 인구 사회이동 → 20대, 여성층 유출 심화
 - 20대 유출, 50대 이상 유입 (귀농/귀촌 증가하고 있으나, 젊은 층에 매력적인 일자리 취약)
 - 남성 유입, 여성 유출 특성(유입 대다수 남성, 여성 유인 일자리 부족)
- 충북도 내 지역별 인구문제 편차
 - 11개 시/군중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021)
 - 내국인은 진천, 청주, 증평, 음성 등 일부 지역에서 증가, 반면 외국인은 도내 11개 시·군 모두에서 증가(일자리 특징 반영)

[그림 2-5] 인구감소지역 분포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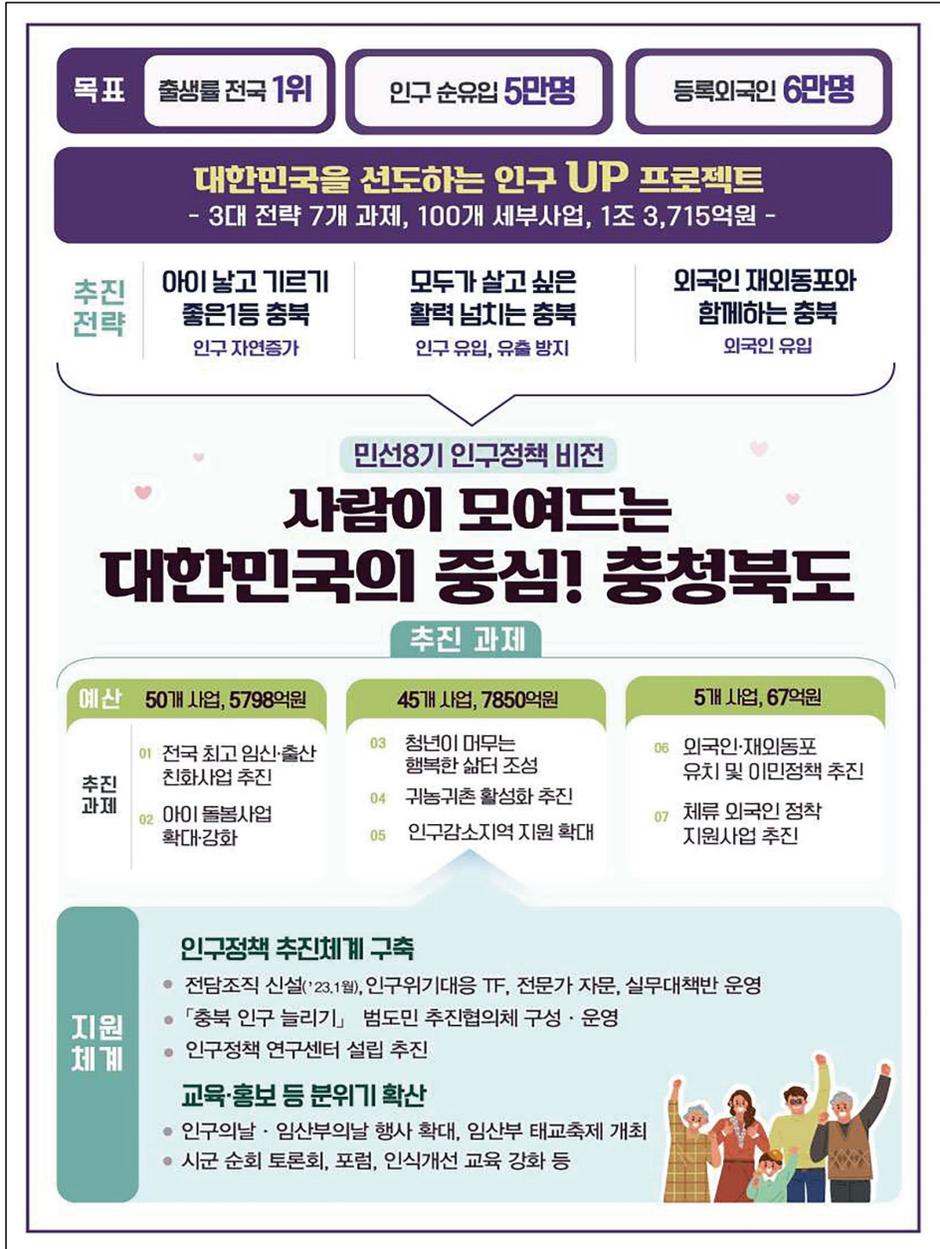
- 충북지역 인구문제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적 특징의 복잡성, 시/군의 인구 문제 편차 등 → 충북의 인구, 지역, 경제, 사회 등 문제의 다각적이고 심화된 검토 필요성 제기

2. 인구정책 추진현황 및 추진체계

1) 인구정책 추진현황

- 충북의 2023년 현재 인구정책 추진현황은 ‘민선8기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 전략’에서 전반적인 체계와 세부전략을 확인할 수 있음
 - 충북의 인구정책은 5개년(2022-2026)을 추진과정으로 하여 전체 부서에 걸친 100개의 세부과제가 추진중에 있으며, 이들 과제는 2023년에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총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민선8기 충북의 인구정책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이 모여드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를 비전으로 하여, ‘출생률 전국 1위’, ‘인구 순유입 5만 명’, ‘등록외국인 6만 명’의 3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그림 2-6] 충북 민선8기 인구정책 비전 및 목표



01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

- 출산 육아수당 1천만원 (국비 연계시 최대 5,285만원) **전국 최고**
- 임산·출산정보 통합 플랫폼 (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
- 전국 임산부 태고축제 **전국 최초**

02 임산부 안심케어 출산환경 조성

- 의료비후불제 임산부 지원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 (난임치료 확대, 난자보존 지원)
- 고위험산모 건강모니터링 **전국 최초**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03 임산부 예우 문화조성

-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전국 최초**
- 임산부가정 우대 시책 (대중교통 지원, 전용청구 운영, 시설 요금 감면, 우선예약제 등)

04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 돌봄

-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18개소 → 28개소)
- 초보부모 육아코칭, 웰컴키즈존 인증 확대
-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남성 육아휴직 1호기업 지원)

05 언제나 든든한 '온종일 돌봄'

- 아간연장 어린이집 (17~24시, 10개소)
- 365일 24시간 보육서비스 (6개월 ~ 만5세 영유아)
-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 (10개 그룹, 50개소) **광역**

06 청년이 살기 좋은 일자리 창출

-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광역**
-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공감 정책 개발 (청년유출원인 정책연구, 토론회)

07 충북형 고향 리소어링 (귀농귀촌)

- 출향단체 연계 귀향정책
- 귀농귀촌 희망동지 만들기 (농촌빈집, 우후부지 등 활용)
- 충북愛꿈 마을 조성 (분류, 일자리, 문화, 의료 복합타운)

08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 인구감소 시군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 생활인구 유입 확대 (디지털 관광주민중, 위-케어선 활성화)
- 인구위기 대응사업 우선지원 (특별조정교부금, 군특회계 등)

09 외국인 유입 및 정착지원

- 외국인·재외동포 이민정책 (실태조사, 정책참여단, 조례제정)
- 외국인 정착 지원 (지역특화법자, 유학생 지역정착, 창업지원, 권익보호 및 정주환경 조성)

10 추진체계 및 분위기 확산

- 전담부서 신설, 인구위기ITF, 전문가 자문위 운영
- 「충북인구 늘리기」 범도민 협의체 구성
- 인구의날·임산부의날 행사 (토론회, 교육, 문화공연 등)

민선8기 인구정책 10대 선도 과제



출처: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정책담당관(2023), 민선8기 충북도 인구정책 추진 전략.

- 이와 함께 인구정책 10대 선도과제를 지정하여, 인구정책 추진전략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음
- 10대 선도과제는 ‘인구자연증가’와 관련한 과제(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 ② 임신부 안심케어 출산환경 조성, ③ 임신부 예우문화 조성, ④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 돌봄, ⑤ 언제나 든든한 온종일 돌봄),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과 관련한 과제(⑥ 청년이 살기좋은 일자리 창출, ⑦ 충북형 고향 리쇼어링(귀농귀촌), ‘외국인 유입 확대’ 과제(⑨ 외국인 유입 및 정착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추진체계 강화 과제(⑧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⑩ 추진체계 및 분위기 확산)로 구성
 - 10대 선도과제 중 ‘인구자연증가’와 관련한 세부과제(50개), ‘인구유입/유출방지’와 관련한 세부과제(45개), ‘외국인 유입’과 관련한 세부과제(5개) 총 100개의 인구정책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아래 표 참조)

[표 2-4] 충북 100대 인구정책과제

(단위: 백만 원)

구분	연번	사업명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총괄			1,371,485	203,714	296,770	276,260	299,798	294,943	
인구 자연 증가 (50개)	1	충북 출산육아수당 지원	90,912	-	22,728	7,576	22,728	37,880	
	2	임신출산 정보 플랫폼 구축	450	-	300	50	50	50	
	3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714	-	-	238	238	238	
	4	고위험 산모 건강모니터링 플랫폼	1,200	-	400	400	400	-	
	5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782	182	150	150	150	150	
	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497	1,337	3,540	3,540	3,540	3,540	
	7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682	386	324	324	324	324	
	8	임산부 의료비후불제 지원	29,922	-	922	2,000	20,000	7,000	
	9	임산부 전담구급대 운영	282	-	168	57	57	-	
	10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확대	7,000	1,715	2,946	1,000	500	839	
	1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2,460	436	506	506	506	506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41,043	5,739	8,826	8,826	8,826	8,826	
	13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대 운영	6,000	900	900	1,400	1,400	1,400	
	14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지원	1,000	200	200	200	200	200	

구분	연번	사업명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인구 자연 증가 (50개)	15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1,250	250	250	250	250	250	
	16	페이커파크와 함께하는 임산부 태교 축제	400	-	100	100	100	100	
	17	임산부 우대정책 및 배려문화 ①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이용)	390	-	-	130	130	130	
	18	임산부 우대정책 및 배려문화 ② (임산부 각종시설 감면, 우선예약제)	-	-	-	-	-	-	비예산
	19	임산부 우대정책 및 배려문화 ③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	-	-	-	-	-	비예산
	20	임산부 건강먹거리 지원	1,050	-	200	250	250	350	
	21	임산부 우대 금융상품 지원	356	-	-	60	99	197	
	22	저소득층 기초귀·조제분야 지원	13,351	2,047	2,826	2,826	2,826	2,826	
	23	디지털 배란테스트기 지원	549	-	-	182	182	185	
	24	난자 냉동 지원사업	230	-	20	40	70	100	
	25	초보부모 행복육아 지원사업	2,275	-	85	438	730	1,022	
	26	남성 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600	-	60	120	180	240	
	27	충북 양육지도 제작	10	-	10	-	-	-	
	28	충북 웰컴키즈존 인증	104	-	26	26	26	26	
	29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영	2,130	426	426	426	426	426	
	30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확대운영	5,671	1,035	1,159	1,159	1,159	1,159	
	31	아이돌봄지원 광역지원센터 운영	1,910	110	450	450	450	450	
	3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82,688	13,660	17,257	17,257	17,257	17,257	
	33	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2,400	-	-	800	800	800	
	34	365일 24시간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609	-	-	203	203	203	
	3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2,342	150	548	548	548	548	
	36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6,538	3,090	3,362	3,362	3,362	3,362	
	37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5,314	2,982	3,083	3,083	3,083	3,083	
	38	한부모가족 양육·교육비 등 지원	115,020	19,820	23,800	23,800	23,800	23,800	
	39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651	127	131	131	131	131	
	40	충북형 어린이집 공동협력사업	200	-	50	50	50	50	
	41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972	-	243	243	243	243	
	42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지원	3,956	-	989	989	989	989	
	43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660	156	126	126	126	126	
	44	시간제 보육지원	9,901	2,029	1,968	1,968	1,968	1,968	

구분	연번	사업명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인구 자연 증가 (50개)	4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18,417	4,397	3,505	3,505	3,505	3,505	
	4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096	2,568	1,632	1,632	1,632	1,632	
	47	충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672	328	336	336	336	336	
	48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확대	1,360	268	273	273	273	273	
	49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한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23,884	4,284	4,900	4,900	4,900	4,900	
	50	초등돌봄교실 운영	44,823	8,392	8,839	9,016	9,196	9,380	
인구 유입 / 유출 방지 (45개)	51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정	100,000	-	25,000	25,000	25,000	25,000	
	52	대학 취업역량강화 지원	955	115	210	210	210	210	
	53	취업준비생 레벨업 지원	140	-	35	35	35	35	
	54	일 경험 지원	1,768	100	417	417	417	417	
	55	충북행복결혼공제	62,872	13,500	12,343	12,343	12,343	12,343	
	56	청년월세 지원	10,820	5,220	2,800	2,800	-	-	
	57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800	160	160	160	160	160	
	58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100	20	20	20	20	20	
	59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1,500	-	375	375	375	375	
	6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147,899	38,058	31,841	26,000	26,000	26,000	
	61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340	50	60	70	80	80	
	62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	3,701	725	726	750	750	750	
	63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4,500	900	900	900	900	900	
	64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	7,378	1,150	1,482	1,632	1,557	1,557	
	65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일자리지원	1,068	-	267	267	267	267	
	66	청년창업지원자금 융자지원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67	청년 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	2,178	354	608	608	608	-	
	68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12,100	2,100	2,500	2,500	2,500	2,500	
	69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70	청년창업 우수기업 발굴 운영	590	134	114	114	114	114	
	71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200	-	50	50	50	50	
	72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	2,520	440	520	520	520	520	
	73	4차산업 미래인재 인큐베이팅 지원	180	20	40	40	40	40	
	74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지원	863	223	160	160	160	160	
	75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지원	3,288	140	787	787	787	787	
	76	경력단절 사전예방 상담지원	24	4	5	5	5	5	
	77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679	436	150	83	10	-	

구분	연번	사업명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비고
인구 유입 / 유출 방지 (45개)	78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	1,340	391	463	374	112	-	
	79	청년여성 디지털 뉴딜 일자리 지원	896	308	307	204	77	-	
	80	청년여성 일자리 플랫폼 운영	1,310	262	262	262	262	262	
	81	충북여성인턴제 운영	4,651	989	863	898	933	968	
	82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34	7	6	7	7	7	
	83	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 일자리 지원	4,529	-	1,050	1,103	1,159	1,217	
	84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11,740	-	1,600	4,400	5,740	-	
	85	충북형 귀농귀촌 보급자리	2,500	-	1,250	1,250	-	-	
	86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17,384	3,064	3,580	3,580	3,580	3,580	
	87	귀농귀촌 유치지원	14,236	3,080	2,789	2,789	2,789	2,789	
	88	충북에서 살아보기	3,757	692	766	766	766	767	
	89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융화교육 지원	135	27	27	27	27	27	
	90	농촌유학 지원	1,000	200	200	200	200	200	
	91	폐교 활용 농촌발전 시설 조정	-	-	-	-	-	-	사업비 미정 (아이디어 공모)
	92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 사업	1,080	540	180	360	-	-	
93	공모형 통합공공임대주택	16,100	-	-	2,800	6,700	6,600		
94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31,519	2,791	16,413	11,212	1,103	-		
95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290,400	47,300	63,100	60,000	60,000	60,000		
외국인 유입 (5개)	96	지역외국인 실태조사 실시	80	-	80	-	-	-	
	97	지역특화형 비자 지원사업	-	-	-	-	-	-	비예산
	98	외국인력 유입·정책 지원사업 ①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4,608	-	-	1,536	1,536	1,536	
	99	외국인력 유입·정책 지원사업 ② (외국인 가족 이주정착 지원)	-	-	-	-	-	-	비예산
100	외국인력 유입·정책 지원사업 ③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2,000	-	500	500	500	500		

출처: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정책담당관(2023), 민선8기 충청도 인구정책 추진 전략.

- 충북 인구정책 100개 세부과제 수행과 관련한 예산은 5년간(2022년-2026년) 총1조 3,715억 원(국비 6,830억 원/도비 3,595억 원/시군비 2,274억 원/기타 1,016억 원) 투입

- 2022년~2023년의 경우 총 5,005억원(국비 2,674억 원/도비 1,226억 원/시군비 747억 원/기타 358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중이며,
- 2024년~2026년간 총 8,710억 원(국비 4,156억 원/도비 2,369억 원/시군비 1,527억 원/기타 6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인구정책 전문가회의와 내부 대응위원회 및 대응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부문 연계를 위하여 「충북인구늘리기」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추진중

[표 2-5] 충북도의 인구정책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담당관 신설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 인구정책 종합기획, 출산장려 시책발굴,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 (소멸지역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생활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 등 - (외국인지원) 외국인 이주 정착지원, 지역특화 비자사업 추진 등 ○ 인구정책 종합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구위기대응 실무대책반(기획관리실장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인구관련 부서) 부서별 사업 검토, 주요통계지표 및 동향 공유 ② 인구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 1회(전문가, 연구원, 민간) 인구정책 자문, 제언, 주요동향 등 ③ 인구위기대응 전담팀(TF) 구성(도지사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 1회(도 실국, 교육청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종합보고 ④ 인구정책 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 기본(시행)계획 심의, 인구정책 사업 조정 등(연 2회 이상) ○ 「충북 인구 늘리기」 범도민 추진 협의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인구 늘리기에 범도민 차원의 대대적인 동참분위기 조성 - (구성) 도,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종교계, 대학, 기업체 군부대 등 - (내용) 출산·돌봄 친화분위기 조성, 충북사랑 주소갯기 캠페인 등 전개
--

출처: 충북 인구정책담당관 내부자료.

제2절 지역단위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필요성

1. 설립 필요환경

- 설립 필요성에 앞서 설립을 촉발시키는 환경요인에 대해 정리해 보면, 하나는 충북지역의 인구문제 영향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하나는 이러한 인구문제에 대한 충북도(및 중앙정부)의 대응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임
 - 첫째 측면은 앞서 인구실태분석에서 제기된 문제특성과 이에 대한 솔루션 도출, 정책지원을 위한 적정 통계자료의 생산, 활용, 제공, 인구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및 정책플랫폼 역할 등의 요구에서 도출되는 필요성임
 - 둘째 측면은 충북의 인구관련 추진정책 확대와 관련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확대와 내실화 지원 역할 요구에서 도출되는 필요성임

[표 2-6]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의 환경조건과 설립필요성

환경조건	기대역할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1) 충북지역 인구문제의 영향 지속적 심화	문제특성과 이에 대한 솔루션 도출, 정책지원을 위한 적정 통계자료의 생산, 활용, 제공, 인구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및 정책플랫폼 역할	① 인구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및 관리 필요
		②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민관대응 네트워크 마련 필요
		③ 인구문제의 다차원적 특성에 따른 학제적 대응 필요
		④ 인구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선제적 검토 필요
(2) 인구문제에 대한 충북도 및 중앙정부 정책 확대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자문, 정책 내실화 지원, 정책분석 및 평가지원 역할	⑤ 충북형 인구정책개발 기본체계 마련 및 체계적 관리/지원시스템 필요
		⑥ 인구정책 개발의 사전영향평가의 중요성 확대
		⑦ 충북도, 시/군 인구정책의 중첩/갈등요인 최소화 및 상생적 협력방안 연구 필요

2. 설립 필요성

1) 인구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및 관리 필요

충북의 인구문제 대응 및 관련 정책개발에 선행하여 충북도의 인구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솔루션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인구문제는 단기적 대응으로 해결가능한 문제라기 보다는 상시적이며 장기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일상의 문제인 동시에, 중앙정부의 인구대응 전제와 달리 인구의 자연증감과 함께 지역 간 이동의 문제는 지역단위 차원에서 각자의 대응을 불가피하게 요구함
 - 이러한 점에서 지역단위의 인구문제 대응은 김한나 등(202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상호 배타적인 행정구역을 가지며 인구의 이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간의 인구 유출과 유입은 제로섬(zero-sum) 게임”과 같을 수 밖에 없음
 - 때문에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방식이 아닌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이 가진 인문·자연,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장점을 살리고 지역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해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김광용, 2022)” 함
- 충북이 지역단위로 인구문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충북의 인구적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자체 인구지표를 생산, 적용해 나가야 함
 - 다시 말해 지역단위에서 “인구소멸과 연관성이 높은 다양한 지표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추적하는 노력(주상현, 2021)”의 토대 위에,
 - 인구문제는 정성호(2018)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과 이로 인한 원인의 다양화, 여타의 정책들과 달리 정책 효과의 시차(time lag)가 길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규모 이상의 지역단위 주체에 의한 장기적, 체계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체계적 관리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북인구의 자연증감 특성, 인구구성 및 사이적 이동 특징, 여타 비수도권 지역과의 차이, 시/군별 인구증감 특성, 기타 공간지리적 특징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 자료의 관리 및 축적은 충북의 인구관련 정책개발과 민간부문 인구연구활동 등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민관대응네트워크 마련 필요

인구문제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에 대한 모두의 과제, 민관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주민중심적 정책을 만들어내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참여 기회 확대 유도 필요

- 인구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와 영향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폭넓은 참여가 필요함은 물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함
 - 때문에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 것은 물론 관내 공공 기관·주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끄는 추진체계를 구축(김광용, 2022)”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 아울러 참여 네트워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접근보다 민관을 아우르는 동시에 정책과 학술, 연구, 참여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연구 관련조직이 상대적 우위를 가질 것임
- 참고로 이해관계자 참여네트워크를 통한 인구거버넌스의 구축은 이미 [충북 제1차인구계획]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지적되었는데, 여기서 인구문제 거버넌스 형성은 인구문제 생태계 해결과정의 선결조건으로 규정함

[표 2-7] 인구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가속화 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지역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 심화, 고령화의 부담 가중, 그리고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지역의 출산력을 높여 차세대로 이어지는 출생아 수 감소를 회복으로 전환시키고, 고령화의 부담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으로 축복되게 만들며,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데드크로스를 역전시키기 위해 모든 할 수 있는 것들 **공간·공유·공존·공생이라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달성해 나가야 함**”

“인구문제는 지역의 존립이 걸려 있는 생태계처럼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공통의 가치를 창출하여 목표를 정립하고,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참여를 통해 실천하는 거버넌스 형성이 선결조건”

출처: 충청북도, 충북제1차인구계획, 충북연구원.

3) 인구문제의 다차원적 특성에 따른 학제적 대응 필요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은 개별 부서별 접근이 아니라 인구학, 가족학, 여성학, 노인학, 청소년학, 교육학, 도시계획학, 행정학, 지역사회학, 지역경제학, 지역개발학, 문화관광학 등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되는 과제,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관련 전문가 집단의 공동(학제적) 접근 필요성 증대

- 인구문제의 다차원적 특성 또는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인구정책TF의 주요 분야를 보면 잘 알 수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논의 분야는 생산연령 인구확충(여성, 외국인, 고령층, 생산성),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학령인구, 병역자원, 지역), 고령사회 대비(재정, 의료/돌봄, 노후소득, 제도/인프라), 초저출산 대응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그림 2-7] 제4기 인구정책TF 추진계획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대응 강화			
현황·영향	논의방향 및 주제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① 생산연령인구 확충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경력단절여성 조기복귀 지원방안 ▶ 양성평등 노동시장 여건 개선방안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단기적 외국인력 부족 대응 ▶ 미래수요 대비 중장기 인력수급파악 및 활용
		고령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계속고용 사회적 논의 및 제도개선 ▶ 고령자 연령계층별 고용활성화 지원
		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분야 청년 인재양성 방안 ▶ 공정한 노동전환 등 생산적 노동시장 구현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② 축소 사회 적응력 강화	학령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문 자원·시설·인력 효율화 ▶ 대학 적정규모화 가속화 및 자생력 강화 ▶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지역 소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 군 인력 충원체계 개선
베이비붐세대 고령층(65세) 진입	③ 고령 사회 대비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 변화 고려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지출 관리
베이비붐세대 초고령층(75세) 진입		의료·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강화 ▶ 의료·돌봄인력 확충 및 중앙·지자체 연계 협력
		노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층 은퇴후 소득 종합적 파악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제도·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정책 다층적·장기적 방향 검토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육성 지원
저출산 장기화	④ 초저출산 대응	지원 강화 및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출산 인센티브 강력 보완 및 영아기 집중투자 보완 ▶ 중앙·지자체 협업 통한 지원 재정비·강화 ▶ 일자리·주거·교육 등 구조적 이슈 대응 및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성 제고

출처: 관계부처합동(2022), 제4기 인구정책TF 주요 분야 및 논의방향(2022.2.10)

- 이처럼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받는 바,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은 특정 분야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분과의 참여, 예컨대 인구학, 가족학, 여성학, 노인학, 청소년학, 교육학, 도시계획학, 행정학, 지역사회학, 지역경제학, 지역개발학, 문화관광학 등 인구관련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임
 - 때문에 관련 전문가 집단의 공동(학제적) 접근방법이 요구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상시 참여가 가능한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 필요성이 강조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구문제관련 연구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로 진행되고 있음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줌

[표 2-8] 인구관련연구의 학제적 접근(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과제명	참여기관(연구참여자 소속기관)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2022)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아테나컴퍼니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2022)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숙명여대, 한림대, 충남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산대학교, 대구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토연구원, 농촌유토피아연구소,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4) 인구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선제적 검토 필요

인구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과제 선도적 연구 필요성 증대
 (예) 행정체제개편(시/군간 행정구역 조정), 행정서비스시스템 개편(기초단체 간 협업시스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역할조정 등)

- 인구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영향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구규모에 기초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시스템의 변화임
 - 인구감소는 기존의 ‘인구규모-행정서비스 제공시스템’, ‘인구구조-행정서비스 내용구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감소에 대응한 행정시스템의 변화(예컨대 행정구역통합, 자치단체 간 협력방식 등)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하여 이미 현정부는 ‘인구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22)’에서 지역 경쟁력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대안으로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표 2-9] 중앙정부의 지역소멸 대응방안

<p>[지역소멸: 국토공간 혁신, 인구감소지역 지원]</p> <p>❶ (국토공간 혁신) 광역 경제·생활권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22~'26년)과 연계하여, 인구규모·경제활동을 반영한 국토·도시·지역 정책 단위 재설계 추진 - 도심융합특구·기업혁신파크 조성, 분권협약 제도 도입(지방자치법 개정, '23년) 등 메가시티 중심 경제협력권 조성 - 도시기능 융복합을 위한 용도지역제 개편*,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 수립 활성화 등 인구감소 대응 도시계획체계 개편 - 지역주민 외 외국인·체류인구 포함한 생활인구 기준 마련 <p>❷ (인구감소지역 지원) 인구감소·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기업, 지방주택 보유 등에 관한 세제혜택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관계부처·지자체 간 연계* 및 성과분석·환류 강화 등을 통한 기금 배분방식 개선 * (예) 시·도의 경우, 시·군·구 간 협력사업 편성 의무화 등 -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일자리·주거·교육·문화·보건의료)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 * 지자체·부처 협업으로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의료·문화 등 생활기반 마련

③ **(지역 균형발전 지원)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을 지원하고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조직 통합 추진
-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2.12.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 인구문제 대응 행정시스템 재편은 이미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광역단위에서 행정체제개편(시/군간 행정구역 조정), 행정서비스시스템 개편(기초단체 간 협업시스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역할조정 등) 등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와 사전적 대안모색 과정이 요구됨
 - 또한 최경화·박경·정숙정(2021)이 지적하듯이 근본적으로 지방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바, 선제적으로 분권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제시, 요구하는 등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연구 역시 아울러 필요함

5) 충북형 인구정책개발 기본체계 마련 및 체계적 관리/지원시스템 필요

인구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지원 및 충북도 및 시/군 인구정책 개발의 가이드 라인 및 관리/운영방안 지원(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 및 인식 공유, 자문 및 평가 지원) 등을 통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행정의 체계적 대응력 제고 필요

- “인구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적 조치, 행정적 사업 및 구체적 시책(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b)”으로 정의되는 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인구정책의 대상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인구구성요소의 변화가 맞물려 만들어 냄

- 인구정책은 대상, 목적, 범위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충북의 인구정책은 앞서 정책추진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정책과제는 그 내용적 특성 및 시급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인구증가 조치인지 아니면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조치인지, 또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정책인가 등에 대한 다차원적 체계구성과 관리가 요구됨

[표 2-10] 인구구조의 변화 과정과 인구정책의 분류방식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인구 구성요소 변화	인구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기회 확대 자녀 양육비용의 상승	출산율 하락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 지방소멸
소득 증가, 보건의료기술 발달	기대수명 증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인프라 격차 확대	수도권 집중화	
대상 기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식)	목적 기준 (전통적 인구학적 방식)	범위 기준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성장동력 확보 인구구조 변화 적응	인구조정 인구대응	광역 협의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2),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인구정책 재정립.

- 이를 통하여 이른바 충북형 인구정책개발 기본체계 마련(①)에서 제시된 충북도의 인구특성 모니터링과 솔루션 개발을 토대로 인구정책의 개념, 사업범위, 사업연계, 관리 및 평가 등 과제별 기본관리 및 정책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등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지원 역할 필요
 - 이러한 연구지원과 함께 충북도 및 시/군 인구정책 개발의 가이드 라인 및 관리/운영방안 지원(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 및 인식 공유, 관련사항 자문 및 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체계적 대응력 제고 노력이 아울러 요구됨

6) 인구정책 개발의 사전영향평가의 중요성 확대

인구정책의 복잡·다양화 및 관련 예산규모의 증대는 인구정책에 체계적 개발지원 및 사후적 관리는 물론 사전적 인구영향평가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지원 필요성 확대

-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단위에서 인구정책이 보다 복잡·다양화해지고, 이와 함께 관련 예산규모 역시 증대함에 따라 인구정책에 대한 개발지원 및 평가/피드백을 위한 사후적 관리의 필요성을 앞서 제기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이러한 개발지원 및 사후적 관리에 앞서 선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사업이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정책추진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적극적 인구정책추진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인구영향평가제도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의 4개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도입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보다 선도적으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경기도의 경우 2023년 5월 기준 설립 추진중)
- 인구영향평가는 최근 논의되는 인구정책대안중 하나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아래 표 참조), 인구영향평가의 체계, 방법론 및 평가결과의 실질적 적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요를 요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필요성 공유와 함께 중장기적인 준비과정을 통하여 장래적으로 적용이 요구되는 과제임

[표 2-11] 인구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언론기사(예)

[아시아경제, “저출산 비상에 제안된 ‘인구영향평가’”, 2023.2.28.]

“‘인구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 구조와 주민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그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즉, 환경영향평가나 규제영향평가처럼 특정한 개발 사업 등이 인구의 집중이나 증가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법률과 정책 수립 때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인구정책은 수도권 지역은 ‘인구 억제’, 지방은 ‘인구 늘리기’에 치우쳐

있었다.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초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행정기능통합, 세수 변화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검토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장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과잉공급과 유희회를 사전에 방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경기도, 내년 ‘인구인지예산’ 첫 편성…저출생·고령화 대응” (2023.4.30.)]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도 본예산부터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과정부터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성인지예산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편성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인구인지예산 도입을 위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및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인구인지예산 편성 관련 지침이 나올 예정이다. 또 이르면 상반기 중에 경기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설치된다.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 예산이 인구정책관점에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고 사업비의 증감 필요성도 검토하게 된다.”

7) 충북도, 시·군 인구정책의 중첩·갈등요인 최소화 및 상생적 협력방안 연구 필요

충북도 및 시·군간 인구정책의 비효율,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상생적 발전을 위하여 협력/연계 방안 연구 지원

- 지역단위에서의 인구정책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인구유출과 유입에 있어 지역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이 존재하는 바, 다수의 지역에서 경쟁적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중첩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인구의 제로섬게임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인접 기초자치단체 간 특히 심화되어 나타남
 -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는 소속 기초자치단체 간 인구구조 격차를 완화하고, 정책개발을 사전에 자문/컨설팅하여 갈등을 중재하는 등 협업체계 구축 역할을 통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김한나·고우림·임예진·정명구·조영태, 2020), 이는 광역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가지는 전문가조직의 운영을 통해 보다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정책의 적정성은 물론 시·군간 사업중복, 갈등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적 단위의 연구지원조직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표 2-12] 인구사업의 시·군간 중복/갈등 사례

[지자체, 사활 건 인구 늘리기 정책, 광주일보(2023.5.23.)]

“사상 최악의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자치단체들이 최근 ‘1만원 아파트’와 ‘다둥이 역대 출산 장려금’ 등 파격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지리를 창출할 지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칫 소모적인 ‘인구 뺏기’ 경쟁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병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1만원 임대 아파트와 같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책은 국고 지원을 못 받는 상황에서 기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사업과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수요·공급 예측이 어려운 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대로 쓰고 있다, 전북일보(2023.5.15.)]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증가를 위한 미중물 역할 대신 시장·군수들의 공약사업 등에 활용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A~E 등급) 평가 결과 대부분 C등급을 받아, 독창적인 정책 발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구 지방소멸기금 140억...“제대로 쓰나”, B tv 부산뉴스(2023.5.10.)]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 유입까지도 꾀하려는 사업들이지만 인구 정책과는 동떨었다는 의견도 이어집니다. 건설 사업이 상당수이고, 구청장의 공약사업, 각 부서에서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들이란 지적**입니다... (하명희/서구의회 의원) 인구 유입, 청년 유입을 가지고 왔는지, 일자리 창출되었는지. 저출생, 보육, 청년에 어떤 효과가 드러나도록 돈을 써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을 보면 전혀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거죠.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급하게 계획을 세우다보니 이같은 사업들만 이름을 올렸다는 설명입니다.”

[대전일보, “[사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문제점부터 보완을”(2023.3.19.)]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돼 7500억 원이 집행됐다. 이어 올해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1조 원이 지원된다. 정부가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로 한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지자체 100여 곳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존의 유사·유관 사업 베끼기에 그친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주로 생활 인프라에 편중돼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기금이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실탄’으로 남용된다는 우려와 ‘눈먼 돈’으로 여기는 기획컨설팅업자들의 배만 불렀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제3장

인구연구센터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

제1절 시·도별 인구전담부서 및
연구센터 운영현황

제2절 인구연구센터 사례분석



- 인구연구센터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설립과정 및 운영과정의 세부사항 분석
- 인구연구센터 사례대상간 비교분석 및 충북인구연구센터 적용 시사점 도출

제1절 시·도별 인구전담부서 및 연구센터 운영현황

- 인구문제 전담부서 운영실태
 - 인구문제를 주 업무로 하는 전담부서의 운영은 단체장의 인구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 이러한 측면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형 광역자치단체와 농촌형 광역자치단체간 전담부서 설치형태를 통하여 특징적으로 나타남
 - 도시형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의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유입적 특성으로 인하여 농촌형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심각성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이는 인구문제 전담부서의 조직규모에서 확인가능한데, 도시형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팀단위이거나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가 있는 반면, 농촌형 자치단체는 전체 자치단체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4개 자치단체는 과단위 규모로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인구문제 전담부서와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인구문제관련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 전남, 경북 3곳임

[표 3-1] 시도별 인구전담부서 및 인구연구센터

	전담부서		인구연구센터
	전담부서(인력)	비고(소속)	
서울	인구변화대응팀(4)	창의행정담당관	
부산	인구정책팀(5)	기획담당관	(부산연구원) 인구영향센터(3)
대구	미래인구정책팀(6)	정책기획관	
광주	-		
인천	인구정책팀(4)	인구가족과	
대전	인구정책팀(3)	균형발전담당관	
울산	인구팀(4)	인구청년담당관	
세종	인구가족팀(5)	(인구+가족) 여성가족과	
경기	인구정책담당관(14)		설립 준비중
강원	지역소멸대응팀(4)	균형발전과	
충북	인구정책담당관(12)		
충남	인구정책과(9)		
전북	인구정책팀(5)	청년정책과	
전남	인구정책팀(5)	인구청년정책관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2)
경북	인구정책과(13)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3)
경남	균형인구정책팀(11)	(균형발전+인구+과사무) 균형발전과	
제주	인구정책통계팀(5)	(인구+통계) 정책기획관	

출처: 각 시도 홈페이지 조직도.

제2절 인구연구센터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틀

- 분석대상
 - 3개 센터: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 연구센터,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 분석내용
 - 설립과정(설치목적, 방식 및 근거)과 조직운영과정(수행기능, 조직 및 인력 운영, 예산조치, 성과 및 향후 검토과제)로 나누어 조사항목 구성
- 분석방법
 - 관련자료분석, 면담조사(조사표 내용 중심) 병행 실시
 - 조사대상: 각 인구연구센터 센터장

2. 사례분석

1)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 설립목적

- 광주/전남지역의 인구환경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력과 전략적 접근 필요, 지역 현황에 기초한 지역주도의 인구분석과 정책설계, 정책설계를 지원하는 정책 플랫폼 구축 필요성 증가
 -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광주·전남 인구정책 및 통계 수집·분석·공유, 인구정책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컨설팅·모니터링, 기타 인구정책 평가 및 관련 연구 수행 등을 목적으로 광주전남연구원 내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설치

□ 설립방식 및 근거

- 설립방식은 자체설치방식으로 연구원 원장의 의지를 반영하여 센터 형태로 설치됨
 - 이에 따라 설치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음

□ 조직운영

① 수행기능

- 인구정책협업회의 운영
 - ▶ 지자체(광주시, 전남, 시군구 인구정책부서), 전문가(광주여성재단, 전남 여성가족재단, 일가정양립본부, 복지재단 등) 협의체 구성·운영
- 인구정책 컨설팅 및 모델 발굴
 - ▶ 지자체 인구정책 컨설팅, 광역 및 시군구 공모사업 지원, 사례발굴 및 공유
- 인구정책플랫폼 구축
 - ▶ 지역인구통계 및 동향 수집/분석, 지자체별 인구실태분석과 정책제안 및 공유, 인구자원 관리, 정보제공, 환류 등
- 인구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 ▶ 지표관리 및 성과환류
- 인구정책 협업인프라 구축
 - ▶ 정보공유(공유플랫폼), 협업프로그램/사업 수행, 관련자원/기관 네트워크 등

② 조직구성

- 센터장 아래 간사와 겸직의 전문가팀으로 구성

③ 인력운영

- 센터 기본운영: 2인(센터장, 간사)
- 정책지원 전문가그룹(센터장 및 간사 포함 8인)
 - ※ 센터장 포함 전체 구성원이 겸직

[표 3-2]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구성원 역할분담(전문분야)

구성원	소속연구실	역할분담
센터장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	저출산고령화
구성원1	지속가능도시연구실	운영총괄
구성원2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	섬/도서지역 활성화
구성원3	지속가능도시연구실	인구통계분석
구성원4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	청년정책/인구유입
구성원5	지속가능도시연구실	간사/도시공간설계
구성원6	지속가능도시연구실	운영지원

출처: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내부자료.

④ 예산조치

- 연구원 자체 편성 예산 활용
- 관련 사업 운영비 1,500만 원 내외(2022)
- 겸직 전문가 활동비는 자문/컨설팅 수당 등으로 충당

□ 성과 및 검토과제

○ 성과

- 시/도와 위탁관계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추진 용이
- 인구정책협업회의 운영을 통한 지자체 인구업무 담당공무원(광주/전남 관련부서 팀장급 및 시/군/구 관련부서 담당공무원)과 전문가 간 인구문제, 인구사업개발 등에 대한 기본 인식 공유(전체 약 60명, 연 2회 개최)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관련 전남/16개 시·군/연구원 간 협업협약 및 자문·컨설팅
- 인구정책 및 연구관련 공동 학술행사 개최
- 지역언론 인구관련 쟁점 자문 및 인터뷰를 통한 정책홍보 등

○ 검토과제

- 인구정책제안 및 네트워크 활동 확대 필요
- 전담인력 및 관련예산 미비로 지속적 대응 및 연구수행 애로 등

2)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 설립목적

- 경북의 인구위기 상황에 선도적/적극적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기초데이터 분석, 적실성 있는 사업의 개발 지원, 다차원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정책지원 기능 확대 목적으로 경북연구원 내 인구정책센터 설치

□ 설립방식 및 근거

- 설립방식은 자체설치방식으로 원내 결정과정을 거쳐 센터 형태로 설치됨
 - 이에 따라 설치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음

□ 조직운영

① 수행기능

- 상시업무
 - ▶ 인구현황 및 정책동향 분석(인구감소 진행상황 모니터링, 중앙부처 주요 정책사업/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등)
 - ▶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사업 현황파악 및 지원상담
- 정책연구 및 신규 프로젝트 개발
 - ▶ 광역단위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 정책연구 및 대형과제 개발
- 다차원적 협력 네트워크
 - ▶ 광역-기초간 연계·협력, 사업발굴 등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 외부 중간지원조직(사업수행기관) 연계
 - ▶ 중앙 및 지역기관 협력네트워킹(분야별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관련 지역기관 - 경북, 시/군)을 위한 중개자 역할 수행

② 조직구성

- 센터장 아래 전문분야별 연구진으로 구성

③ 인력운영

- 센터 기본운영: 6인(센터장, 연구위원, 전문위원, 위촉연구원)
- ※ 센터장, 위촉연구원 전임 / 연구위원 겸직
- ※ 2022년의 경우 센터장(1), 연구지원(2)으로 구성되었으나, 2023년 경북의 보조사업 시행과 함께 관련 연구참여 및 지원인력 예산운용을 통해 센터 구성원 확대
-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컨설팅팀은 센터구성원을 포함하여 별도 구성

[표 3-3]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구성원 역할분담(전문분야)

구성원	역할 및 전문분야
센터장	센터장/도시계획(주택, 도시)
구성원1	연구위원/교육(교육행정, 대학교육)
구성원2	연구위원/지역개발, 지역학 등
구성원3	전문위원/도시계획(도시 및 생태, 산림공간)
구성원4	위촉연구원
구성원5	위촉연구원

출처: 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④ 예산운영

- 2022년 겸직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인건비 포함)가 소요되지 않았으나, 2023년의 경우 경북도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연구과제 수행예산을 센터 운영과 연계
- 위촉연구원 2인 계약을 통해 전임 지원인력 확보

□ 성과 및 검토과제

○ 성과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계획, 사업개발 등에 대한 자문/컨설팅
- 경북도 및 시군에 대한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 관련계획 수립지원(‘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시군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수행중)
- 인구문제 및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 검토과제

- 도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보조사업 등 지속적 연계방안 모색 필요
- 상시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임직원 확보
- 업무량의 적정성 검토(2023년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사업 수행 등으로 인하여 상반기 중 상시업무 수행 곤란) 등

3)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 설립목적

- 부산시의 인구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이 인구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분석하여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상
 - 인구영향평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 관련사업의 인구구조 개선효과 증대 및 새로운 사업발굴 및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인구감소 심화에 대응한 인구정책 발굴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추진
 -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제고’에서 ‘활력 있는 인구구조 형성’과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 방향으로의 전환 모색

□ 설립방식 및 근거

- 설립방식은 위탁설치방식으로 부산시의 관련계획 수립 및 의회심의과정, 위탁 절차를 통하여 부산연구원에 센터 형태로 설치됨
 - 설치의 법적 근거는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제7조(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에 기초하고 있음

□ 조직운영

① 수행기능

- 인구영향평가 관련업무(센터의 기본수행기능은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 인구영향평가 실시
 - ▶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공모(유관기관 및 구·군 의뢰과제를 포함한다)
 - ▶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발주 및 관리
 - ▶ 인구영향평가 관련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인구영향평가 관련 외부기관 협업 등
- 인구문제 대응업무
 - ▶ 인구정책 모니터링 및 인구DB 구축
 - ▶ 인구문제 전문가풀 구축
 - ▶ 인구정책사업 평가체계 제안
 - ▶ 인구정책 연구/자문 등

② 조직구성

- 센터장(겸직) 아래 전임연구원(계약직2)으로 구성
- 원내자문단 운영(관련 전문가 겸직 지원)

③ 인력운영

- 센터 기본운영: 3인(센터장, 연구원2)
- 원내자문단(겸직)

[표 3-4]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구성원 역할분담(전문분야)

구분	구성원	역할 및 전문분야
센터	센터장	센터장
	구성원1	연구원/인구영향평가
	구성원2	연구원/인구영향평가
원내자문단 (겸직)	자문위원1	자문위원/도시 및 지역계획, 시설입지, 도시정책
	자문위원2	자문위원/청년문화, 정보사회, 사회연결망

출처: 부산연구원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④ 예산운영

- 위탁계약(5년)에 의하여 1년 차에 112백만 원의 예산 운영(2022년 4월 개소)
-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 성과 및 검토과제

○ 성과

- 인구영향평가 시행, 2023년도 사업계획 등 반영 개선
- 인구DB 구축(인구 관련 데이터 업데이트 및 정책발굴, 인구정책 전문가풀 구축 등)
- 인구문제 관련 연구회 발표 및 토론, 관련기관 자문 등을 통해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

○ 검토과제

- 인구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지속적 대응방안 연구 필요
- 전임인력 확대를 통해 상시적 인구연구 수행체제 구축 필요 등

3. 비교 및 시사점

○ 사례분석 비교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핵심	인구정책네트워크 플랫폼	인구감소지역 대응	인구영향평가
목적	기타	인구계획 등 자문 지역인구통계 생산 관련전문가 네트워크 (학술행사 포함) 인구교육 인구감소대응 컨설팅 (인구영향평가 ×)	인구계획 등 자문 지역인구통계 생산 관련전문가 네트워크 (학술행사 포함) 인구교육 인구감소대응 컨설팅 (인구영향평가 ×)	인구계획 등 자문 지역인구통계 생산 관련전문가 네트워크 (학술행사 포함) 인구교육 (인구감소대응 준비)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	방식	연구원 자체설립	연구원 자체설립	부산시 위탁
	근거		-	- 부산시 인구정책기본조례 -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센터 설립 명시)
운영	조직 인력	센터장 운영지원1 * 겸직	센터장 연구위원2 전문위원1 위촉연구원2 * 위촉연구원의 겸직	센터장 연구원2(계약직) * 연구원 전임
		원내 워킹그룹 7 * 조직구성원 포함 * 저출산고령화, 섬/도서 지역활성화, 인구통계, 청년정책, 도시공간설계 등 전공	원내 컨설팅단 9 * 조직구성원 포함 * 원내 각 전공분야	원내자문위원 2 * 도시공학, 사회학
	예산	연간 2천만원 내외 * 개별 자문/컨설팅비	경북도 보조사업비용 (약 4억원)을 센터운영과 연계	1억 1200만원 (대부분 2인 인건비)
강점 / 향후 과제	강점	-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 정책협의회 운영 등 - 인구관련 사업 다양화 등 확정성 ↑	- 경북도와의 보조사업 (용역)을 통해 관련 재원 확보 - 인구감소관련 체계적 대응(계획수립, 진단, 컨설팅, 평가 등)	규모 작으나 안정적 운영 (5년 단위 계약)
	향후 과제	전담인력 × (소장1인 대응) 예산 한계 원장, 센터장 바뀔 경우 지속성 문제 발생	핵심업무외 하반기 추진 계획(업무량에 따라 유동적) 보조사업(용역) 확보 여부에 따른 연도별 편차 큼	핵심사업외 여타업무 수행 어려움(대부분 센터장 대응, 계약직 2인은 인구영향평가 전담)
	향후 과제	- 일정 부분 도와 인구관련 사업계약을 통해 재원 및 전담인력 확보 필요	- 적정 전담인력 확보 통해 사업간 균형적, 안정적 추진 필요 -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기능/정책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시군의 경우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 제각각, 위기의식 제한적)	- 재원 확보위해 사업확대 검토(인구감소지역 지원 기금 확보)

○ 성과 및 시사점

- 연구기관 성과의 비계량적 특성, 설치이후 단기간 운영 등으로 계량적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운영과정을 통하여 3가지 측면에서 성과 논의 가능

[표 3-5] 사례분석을 통한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의 주요 성과

성과	관련 사항
① 인사업 공무원 및 단체관계자의 지역인구문제 인식 및 대응체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무원과 관련단체, 공무원간에도 시/도 분청과 시/군/구 인사업담당 공무원 간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차가 크고, 인구정책 및 사업개발에 대한 이해도 제각각 - (대응) 정책협업회의 운영(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공무원(광주/전남, 시/군/구 인사업관련부서 담당), 관련 단체(광주여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일가정양립본부, 복지재단 등) 약 60여명 * 운영: 연 2회 개최 정례화 * 성과: 인구문제/정책관련 특강/토론,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인구 문제/사업개발에 대한 공동의 방향성 정립, 인사업개발 정보 등의 상호교류 및 상호이해 확대, 인구문제 대응의 정기적 공공네트워크 구축 등
② 지역의 인구문제, 대응정책 등에 대한 주민홍보 확대, 자치단체 인구정책 정당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역사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구전문가 부재 → 지역뉴스매체의 인구관련 언론 보도 극소수 → 인구문제나 정책 홍보 한계 - (대응) 인구연구센터장의 언론 인터뷰, 외부 세미나 발표 등 (3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지역뉴스매체에서 인구관련 주요 이슈발생시마다 지역인구 문제 전문가로서 인구연구센터장 인터뷰, 인구관련 세미나/토론회 주요 참석자로서 인구정책 발표/토론 등 * 성과: (주민측면) 인구연구센터 운영이후 지역인구쟁점에 대한 지역 뉴스매체 인터뷰 전문가 대응, 관련 세미나.토론회 정책발표 등을 통해 주민의 인구문제 관심도 제고(예: 지역뉴스매체에서 인구문제 보도 확대: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의 경우 설립이후 1년간 10여차례 이상 인터뷰 및 활동 보도 → 지역인구문제에 대한 이슈 제기와 전문가 대응 일상화) (자치단체측면) 전문성 권위(인구연구센터 센터장)으로서 자치단체 인구정책 및 사업추진 정당성 강화 등

성과	관련 사항
③ 도 및 시/군에 대한 상시적, 즉각적 자문/컨설팅 가능	- (기존) 인구정책 수립 및 사업개발시 도, 시/군 관련사업부서별로 전문가 탐색, 자문 요청
	- (대응)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팀 구성(3개 센터) * 구성: 연구원내 전문가를 겸직으로 하여 도, 시/군 자문/컨설팅 요청에 즉시 대응(부산연구원 원내자문단, 광주전남연구원 원내 워킹그룹, 경북연구원 시군별 지방소멸대응컨설팅팀 구성) * 운영: 연구원내 전문가 활용(겸직), 상시 대응 * 성과: 도, 시/군의 인구문제관련 자문/컨설팅 일원화에 의한 즉시적 전문가 매칭을 통한 대응력 향상

- 사례분석을 통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인구관련 연구센터를 설치할 경우 설치 근거나 적정 전담인력 확보문제와 함께 도의 인구연구조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제적 접근가능성, 정책플랫폼 역할수행, 체계적 데이터관리, 상시적 협력관계 유지 측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6] 도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시사점)

역할구분	시사점
학제적접근	- 인구문제, 인구정책의 다차원적/학제적 특성상 센터의 운영직원의 인구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확보의 용이성 고려
정책플랫폼	- 인구문제에 대한 전체 도민적 관심과 인식공유를 위하여 민관 인구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역할이 가능한 한편, - 인구관련 교육, 컨설팅 등의 기본역량 구비 필요
데이터관리	- 인구관련 정책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데이터 운영의 체계적 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효성있는 데이터 생산 및 안정적인 관리, 활용역량 구비 필요
상시적협력	- 충북도 및 도내 시/군의 관련 계획수립, 사업개발에 상시적 협력관계 가능성 고려

제4장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 타당성분석

제1절 타당성분석모형

제2절 타당성분석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 타당성분석

- 충북인구센터 설치타당성분석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분석 모형 설정
- 정책적 타당성분석 모형의 항목별 분석 및 종합분석결과 제시

제1절 타당성분석모형

○ 타당성분석 유형

- 경제적 타당성분석, 정책적 타당성분석 등
- 본 연구의 대상인 인구연구센터의 경우 인구정책추진에 대한 지원 및 통계, 학술연구허브로서의 역할수행 등이 요구되는 바, 수익 및 편익창출에 근거한 경제적 타당성분석은 불가하며, 정책적 타당성분석을 통하여 설치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분석의 제모형

- 정책적 타당성의 일반적 분석모형은 기획재정부훈령(아래 [표] 참조)에 의한 것으로 '사업추진여건'과 '정책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사업이 정책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연구기관의 설치와는 적용상 다소 차이가 있음

[표 4-1] 정책타당성 분석항목(1): 기획재정부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사업추진여건	-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효과	- 일자리 효과 - 생활여건 영향 - 환경성 평가 - 안전성 평가 (선택) - 사업특화항목
사업별도평가항목(선택적)	- 자원조달 위험성 - 문화재 가치

출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 아래 [표]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근거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 개발사업분야에 특화하여 제정한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등을 대상으로 평가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에서는 하위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추진체제 및 추진의지’를 분석하고,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에서는 ‘자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분석항목으로 하고 있음
- 이외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4-2] 정책타당성 분석항목(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추가 평가항목(선택적)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 자원조달 가능성 - 법·제도적 위험요인 - 추가 평가항목(선택적)
사업특수 평가항목	- 추가 평가항목(선택적)

출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당성분석 모형

-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타당성 분석틀을 기본으로 하여 평가항목을 정책추진 일관성과 정책추진 안정성으로 대별하고, 이에 따른 1차 항목과 세부분석사항을 설정
- 정책추진의 일관성이란 인구정책과 관련된 충북도의 추진계획과의 연계성, 도/시/군의 사업추진의지의 반영정도 및 유사자치단체의 관련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필요성의 근거를 대상으로 분석
- 정책추진의 안정성이란 충북도의 (가칭)인구연구센터 설치와 관련한 설치 근거, 자원마련 및 사업수요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가를 대상으로 분석

[표 4-3] 정책타당성 분석모형(안)

○ 정책타당성 분석모형

1차항목	2차항목	분석세부사항
정책추진 일관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사업추진의지 - 관련 사례	- 충북도의 인구관련 정책 및 계획 등과의 연계성 등 -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및 실천전략 등 - 유사 자치단체의 관련 사례(관련 의지의 공유)
정책추진 안정성	- 법적 근거 - 자원 안정성 - 업무수요의 지속성	- 설치관련 법적 근거 여부 - 소요 자원의 안정적 공급 여부 - 센터업무의 안정적 수요, 업무의 미래적 중요성

제2절 타당성분석

1. 타당성분석방법 및 평가기준

○ 앞서 제시된 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의 타당성분석은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방법과 분석포인트를 활용함

[표 4-4] 타당성분석방법

1차항목	2차항목	분석세부사항	분석방법 및 포인트
정책 추진 일관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충북도의 인구계획, 인구정책 등 인구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	- 문헌분석/자료분석 (인구계획/인구정책)
	- 사업추진의지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추진의지	- 자료분석 (회의, 언론인터뷰 등 의지표명 자료)
	- 관련 사례	유사 자치단체의 관련 사례 (관련 의지의 공유)	- 자료분석 (유사사례 연간계획 등 관련자료) - 관계자면담 (유사사례 관계자(전문가)면담)
정책 추진 안정성	- 법적 근거	설치관련 법적 근거 여부	- 자료분석 (관련 조례 등)
	- 재원 안정성	소요 재원의 안정적 공급 여부	- 자료분석 (인구정책관련 예산)
	- 업무수요의 지속성	센터업무의 안정적 수요, 업무의 미래적 중요성	- 자료분석 (관련 법령, 관련기관 산출물 등)

○ 타당성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 4-5] 타당성 평가 기준

구분	타당성 평가 기준	평가
1	- 공신력을 갖는 법령, 정책, 계획, 단체장 정책표명 등에서 해당 평가항목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예)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설립을 법령이나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 단체장의 설립 의지 표명 등	타당성 매우 높음
2	- 직접적 명시는 없지만 평가항목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예)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수행기능이 정책추진상 현재 필수불가결하게 활용되고 있고, 향후에도 활용이 예견되는 경우	타당성 높음
3	- 직접적 명시나 관련성이 높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활용 필요성의 도출이 가능한 경우 (예) 현재 직접적으로 활용정도는 낮지만, 향후 활용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타당성 검토 가능
4	- 직접적 명시나 관련성은 물론, 논리적으로도 활용 필요성의 도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	타당성 없음

2. 타당성분석

1) 정책추진 일관성 측면

가. 상위정책과의 연계

□ 분석목적

- 상위정책과의 연계는 인구문제에 대한 충북의 최상위 추진계획에서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유추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의 목적정당성을 확보

□ 분석자료

- 현시점에서 참조가능한 충북의 인구문제 관련 최상위정책으로는 2021년 만들어진 충북인구계획과 2023년 발표된 민선 8기 현 단체장의 인구정책 추진 전략이 있음

-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

□ 분석결과

① 충북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 충북연구원에 위탁 수행된 충북의 제1차 인구기본계획은 인구정책추진과 관련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시하면서, ‘충북의 성공적 인구정책을 위한 혁신방안’의 하나로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혁신방안은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관련된 사항, 인구정책적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인구정책 추진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면 정책추진역할(인구정책 전담조직 구성, 인구정책위원회 운영¹⁾)과 정책지원역할(인구정책 니즈 조사/인구정책영향평가제도,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인구정책 리빙랩 구축·운영)의 상호보완적 역할수행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2023년 5월 기준 정책추진역할과 관련된 전담조직(인구정책담당관)과 인구정책위원회의 경우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인구관련 수요조사, DB구축, 성과평가, 영향평가, 시민네트워크 운영, 지역의 인구활력·회복력을 연구하는 연구조직으로서의 리빙랩 구축은 현재 논의진행형의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기본계획의 인구관련 연구리빙랩 구축(안)은 민선 8기에 들어와 인구정책담당관이 설치되면서 상보적 협력조직체인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안으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임

1) 보고서는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의 주요 내용으로 인구관련 정책의 심의/의결과 도/시/군의 정책 및 사업자문(컨설팅)을 제시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정책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정책추진역할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지원역할, 즉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역할에 해당함.

[표 4-6] 충북의 성공적 인구정책을 위한 혁신방안(안)

혁신방안	주요 내용
인구정책 전담 조직 구성	- 도·시·군에 인구정책 담당관·감사관 지정 운영 - 모든 실·국 단위 조직에서 인구정책 전담책임자 지정, 정책협력 및 평가업무 수행 - 인구정책 대외협력관(청년 인구, 관계 인구 등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협력, 기업협력, 국제협력, 타 시·도협력 담당)의 지정 운영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초슬로화·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인구 활력과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인구정책 위원회 운영 - 도, 시, 군의 정책 및 사업자문(건설팀) -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집단을 위원으로 위촉
청년기금 설치	-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따른 조례제정 - 청년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여건을 확대하여 비혼, 무자녀 등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인구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과 운영확대 (지역대학 졸업 청년 인재들의 지역 정착 등 지원)
주민참여 인구정책예산제도 확대	- 주민이 결혼, 출산, 육아, 건강, 행복, 노인복지 등과 관련된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규모와 방법 확대 - 주민이 관련 예산편성분만 아니라 전체 예산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인구정책 니즈 조사, 인구정책영향평가제도	- 매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주민 취향 중심의 수요조사와 DB구축, 정보공유 - 니즈조사 결과를 모든 지방행정 분야에서 정책지표로 의무반영 및 성과평가 -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의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효과(영향)를 성과분석 제도와 연계하여 실시 - 일정규모 이상 주택단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인구동태성에 대한 영향평가 시행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 일정한 이상의 주민이 발의하고 자치단체장이 주도하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공론화, 숙의와 소통 강화. 실효성 있는 시민토론회 운영
인구정책 리빙랩 구축·운영	- 지역의 인구활력·회복력을 연구하는 조직으로서 리빙랩 구축 - 시민참여와 체감을 기반으로 하는 인구 솔루션 도출과 실험

출처: 충북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②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

- 앞서 제시된 ‘충북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인구정책을 위한 혁신방안’은 민선8기에 들어와 정립된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에서 인구정책추진 체계로 구체화됨

- 민선 8기 충북의 집행부는 2023년 발표한 인구정책비전과 함께 100대 세부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1조 3,715억원의 대규모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구정책추진체계의 한 부분으로 ‘(가칭)인구정책연구센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음

【표 4-7】 민선8기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 인구정책담당관 신설('23. 1.)	- (인구정책) 인구정책 종합기획, 출산장려 시책발굴,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 (소멸지역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생활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 등 - (외국인지원) 외국인 이주 정착지원, 지역특화 비자사업 추진 등
○ 인구정책 종합관리 체계 구축	❶ 인구위기대응 실무대책반(기획관리실장 주재) - 수시(인구관련 부서) 부서별 사업 검토, 주요통계지표 및 동향 공유 ❷ 인구정책 전문가 자문회의 - 분기 1회(전문가, 연구원, 민간) 인구정책 자문, 제언, 주요동향 등 ❸ 인구위기대응 전담팀(TF) 구성(도지사 주재) - 분기 1회(도 실국, 교육청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종합보고 ❹ 인구정책 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 인구정책 기본(시행)계획 심의, 인구정책 사업 조정 등(연 2회 이상)
○ 「충북 인구 늘리기」 범도민 추진 협의회 구성·운영	- (목적) 인구 늘리기에 범도민 차원의 대대적은 동참분위기 조성 - (구성) 도, 시군,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종교계, 대학, 기업체 군부대 등 - (내용) 출산·돌봄 친화분위기 조성, 충북사랑 주소갖기 캠페인 등 전개
○ 인구정책 연구센터 설립	- (목적)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인구정책을 지원할 전담 센터 설치 - (기능) 정책 연구, 인구 영향평가, 주요 어젠다 발굴, 자자체 컨설팅 등

출처: 충북 기획관리실 인구정책담당관(2023),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

○ 분석결과

- 상위계획을 통하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구정책담당관)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가칭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유기적 협업파트너십 구축은 필수적 상황임
- 충북의 경우 인구정책 관련 상위추진계획에서 민선7기에 만들어진 인구계획은 물론, 민선8기에 추진된 인구정책에서도 지속적으로 인구관련 연구조직

(센터)의 설립 필요성 제기하고 있는 바, 상위정책 연계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나. 사업추진 의지

□ 분석목적

- 사업추진 의지는 최고정책결정권자(단체장)이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를 대외적으로 직접 표명하거나 관련 언명을 통해 유추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의 추진가능성을 확보

□ 분석자료

- 최고정책결정권자(단체장)의 인구문제관련 의지표명 자료
 -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정책의지 언명 자료(언론보도)

□ 분석결과

- 인구문제해결에 대한 최고정책결정권자(단체장) 의지의 경우 민선 8기 단체장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인구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다양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 2022년 7월 단체장 취임이후 조직내부적으로 “충북도정은 출생률을 높이는 일을 1차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였고, 2023년 신년사에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늘려 “젊은 세대가 출산과 이주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 이어 언론인터뷰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출생률 증가’라는 난제와 정면”으로 맞붙어 적극적인 출산육아지원사업과 교육·문화·일자리 등 정주여건 정책추진을 피력하였고, 삼일절 기념식사에서는 “충북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애국이라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와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의지의 강도를 높임

[표 4-8] 단체장의 인구문제관련 의지표명 사례1(언론보도)

[음성뉴스(<http://www.esnews.co.kr>), 2022.08.22]

김영환 도지사, “충북도정, 출생률 증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라” 김영환 충북지사, 확대간부회의서 출생률 증가 강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출생률 증가에 초점을 맞춰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북도정은 출생률을 높이는 일을 1차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충북에서 아이를 낳고, 귀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의 도정은 충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 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일들이 결국 충북의 출생률 증가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지사 2023년 신년사]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세대가 출산과 이주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전자신문, 2023.1.24]

[지방회생, 산업이 답이다] <1>김영환 충북도지사

“올해 우리 충북은 정부도 하지 못한 불가능에 가까운 ‘출생률 증가’라는 난제와 정면으로 붙어볼 생각이다. 더 이상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물론 보육·교육·문화·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먼저 도내 인구의 자연증가를 위해 출산·육아지원 사업을 추진 할 것이다. 첫 만남 이용권 등 국가정책과 연계해 출산수당 및 육아수당의 통합개념인 출산육아수당 지원을 새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보육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일 자리를 찾아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의료비 후불제, 1억 농부, AI 바이오 영재고·국제학교 설립, 문화소비 10.10.10. 운동, 첨단 우수기업 60조원 투자유치,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등 모든 정책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더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한 힘찬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충청북도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충청북도와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브레이크뉴스(2023.3.1.)

김영환 충북도지사, 3·1절 기념식 “출산 장려로 인구 늘리는 일이 구국”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루빨리 출산을 장려하고 대한민국의 인구를 늘리는 일이 구국이고, 그 길에 충북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북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애국이라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와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2023.3.23.)

충북도, 인구절벽 시책 발굴 드라이브

“김영환 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민선8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출산육아수당과 함께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발굴·기획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실현과 출생률 전국 1위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단체장의 인구문제 해결의지는 조직내부나 일반적 언명 이외에도 도내 시/군 단체장, 의사회, 기업인 모임 등 다양한 자리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협조를 구하고 있음

[표 4-9] 단체장의 인구문제관련 의지표명 사례2(언론보도)

- 충북도-시장/군수회의(인구문제 적극 동참) 2023. 3.16

“인구소멸 시대에 충청북도의 명운이 걸려있는 출산문제, 귀농귀촌문제, 지역발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자”

김영환 충북지사-시장/군수, ‘인구소멸문제 해결 최우선’ 국제뉴스(2023.3.16)

김영환 충북지사, 의사회·치과의사회 총회 참석, 뉴스티앤티, 2023.3.19.

지난 18일 충북도의사회와 충북도치과의사회의 정기대의원 총회 참석 의료인 격려

“의료사각지대 해결이 귀농귀촌·인구증가 앞당긴다”

[뉴스핌, 2023.5.25.]

“충북 8개 시군 인구소멸 고위험·위험단계 진입” 충북경제포럼, ‘지방소멸 시대’ 기업 역할 등 논의 / 청남대서 경제콘서트 개최...다양한 해결방안 제시

“25일 충북경제포럼 주최로 청남대 대통령기념관 영빈관에서 열린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도정정책 세미나에서 ... 김영환 지사는 **‘지방소멸 문제는 주로 일자리 부족과 인구감소에 기인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체장은 인구문제에 대한 의지의 직접적 실천으로 인구정책 100대 세부과제 추진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들 수 있음
 - 충북은 2023년 전담부서인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인구위기대응 전담팀(전담팀은 도교육청과 함께 초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과 출산, 돌봄, 아동 복지, 모자보건, 청년·여성 일자리, 외국인, 귀농·귀촌 등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중점 추진), 인구문제 실무대책반(기획관리실장 주관, 충북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운영하고 있음)
 - 또한 2023년 5월 기준 ‘충북인구늘리기 범도민추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인구정책추진을 지원할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분석을 의뢰한 상황임
- 인구정책 추진은 인구문제의 특성상 계획단계부터, 진행, 평가 등 전체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며, 정책의 확대와 인구문제의 연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체계적/다분야적 전문가 참여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
 - 인구연구센터 설치에 대한 최고결정권자의 직접적 의지표명은 없지만,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하여 충북도정의 제1목표를 인구정책에 두고 지속적인 의지표명과 대응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가칭)인구정책연구센터가 인구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솔루션, 즉 정책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 의지를 유추 가능
 - 또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 추진전략 등이 최고정책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유추가능한 바, 사업추진 의지(단체장)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 관련사례

□ 분석목적

- 관련사례는 유사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과 운영과정 분석을 통하여 충북에서도 연구센터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의 목적타당성을 확보

□ 분석자료

- 광주/전남(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경북(경북연구원 인구정책연구센터), 부산(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의 내부 운영계획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자료

□ 분석결과

- 관련사례의 분석결과는 본 연구보고서 인구관련 연구센터 사례분석 부분 참조 (※ 본 연구보고서 제3장 참조)
- 2020년 전후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적 이슈가 심화되면서 광역단체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 움직임(광주전남연구원, 경북연구원)
 - 이후 인구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 증가와 함께 광역단체 주도의 연구센터 설치(부산광역시, * 경기도의 경우 현재 설립 추진중), 또한 연구기관 자체설치의 경우도 지역소멸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광역단체 지원 확대를 통하여 연계 강화(경북도의 경북연구원 보조사업 확대)
 - 현재 운영중인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관련 연구센터는 인력 및 예산지원 측면에서 보완적 요소가 있지만, 추진목적과 성과적 측면은 물론, 향후 확대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북 역시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지원기능을 선도적/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상시적 정책지원/협업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칭) 인구정책연구센터가 시급히 요청됨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관련사례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정책추진 안정성 측면

가. 법적근거

□ 분석목적

- 법적근거는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조례 등 법적 측면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의 절차적 근거를 확보

□ 분석자료

- 관련 조례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 분석결과

-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근거의 확보는 3가지 측면으로 접근 가능함
 - 첫째, 인구관련 포괄적 업무수행의 경우 인구정책관련 일반 조례에 규정
 - 둘째, 인구관련 특정 업무수행의 경우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례 제정(예: 인구영향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센터의 경우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 [부록1] 참조)
 - 셋째,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관 센터 설치에 대한 규칙 제정(예: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운영규칙’, [별첨] 참조)
- 충북의 경우 인구정책관련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연구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방식은 위에서 제시된 첫째와 셋째의 근거방식임
 - 첫째 방식의 경우 관련 조례의 내용을 통해 분석가능하며, 셋째 방식의 경우 자체적으로 인구관련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유관기관의 역할에 속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함

-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와 관련한 충북의 조례는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임
 - 당 조례는 인구관련 사업의 외부 위탁에 대하여 제19조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4월 7일 개정시행을 통하여 위탁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음

[표 4-10] 충북 인구정책조례의 사업위탁 근거

개정전	제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후	제1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10조에 따른 포럼 등 개최 사업 3. 제11조에 따른 홍보·교육 사업 ※ [참고] 제8조 1항 1. 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2.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3.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출처: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 충북의 인구정책조례에 의할 경우 인구정책관련 포괄적 사항(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포럼 등 개최 사업, 홍보·교육 사업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때문에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외부위탁의 경우)는 절차적 과정상 법적 근거의 타당성은 매우 높음
 - 또한 유관기관 자체설치를 의뢰하는 경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별도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나. 운영예산 확보

□ 분석목적

-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운영예산(위탁의 경우, 자체 설치의 경우 별도 예산 없음) 확보는 인구정책에 대한 현재 및 장래적 수요의 지속성 여부에 기초하는데, 이는 인구정책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일 경우 이를 지원할 연구센터 운영 역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인구정책의 수요는 이에 투입되는 예산규모와 지속성 검토를 통하여 분석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인구관련 연구센터 운영의 안정성 근거를 확보

□ 분석자료

- 인구정책 예산
 - 충북 인구정책 세부과제 예산
 - 충북 지역소멸대응기금 예산

□ 분석결과

- 충북도의 인구정책 예산은 크게 충북도가 주관하고 있는 인구정책추진 세부과제 예산과 충북도와 해당 시/군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이 있음
 - 전자의 경우 충북도의 인구정책 100대 세부추진과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5개년(2022~2026)간 총 1조 3,715억 원이 투입되며, 2022~2023년의 경우 5,005억 원(국비 2,674억 원, 도비 1,226억 원, 시군비 747억 원, 기타 358억 원)투입, 2024년 이후 8,710억 원(국비 4,156억 원, 도비 2,369억 원, 시군비 1,527억 원, 기타 6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 후자의 경우 충북도 및 지방소멸대응지역 6개 시/군에 배분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2년~2023년의 경우 2년간 총 1,104억 원(광역지원계정 278억 원, 기초지원계정 826억 원)이 운영되고 상황이며, 지원금은 2022년부터 평가를 통해 10년간 지급이 계속될 예정임

[표 4-11] 충북 인구정책 추진예산

추진예산	2022~2023	2024이후	
충북인구정책 세부과제	5,005억원 (국비 2,674억원 / 도비 1,226억원 / 시군비 747억원/기타 358억원)	(2024~2026) 8,710억원 (국비 4,156억원 / 도비 2,369억원 / 시군비 1,527억원/기타 658억원)	5년간 총 1조 3,715억원
충북지방소멸 대응기금	1,104억원 (광역지원계정 278억원 / 기초지원계정 826억원)	(2031년까지 매년 평가 지원)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북의 인구정책예산은 매년 평균 3,000억 규모로 추진이 예상되며, 현재의 국가 전체적인 인구실태와 충북의 대응조치를 고려할 경우 인구정책은 위에서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때문에 인구정책을 지원할 (가칭)인구정책연구센터의 역할 역시 향후 상당 기간 필요성이 인정되어 안정적인 위탁비용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는 바, 예산확보 가능성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높다고 판단됨²⁾

다. 추진사무

□ 분석목적

- 추진사무는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수행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의 절차적 근거를 확보

2) 참고로 (가칭)인구정책연구센터의 위탁운영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운영비(초기 설립단계)는 관련 사례 연구센터의 예산(2,000만 원 내외~1억 1,200만 원)을 참고할 때, 상시사업(인건비(최대 3인), 운영 및 사업비 포함시: 2억 원 내외)과 수시사업(겸직, 각 분야별 전문가 5~8인 규모: 컨설팅, 자문비용으로 총당 가능)을 고려하여 2억 원 내외로 예상됨.

□ 분석자료

- 관련 법령, 인구정책추진 현황, 충청북도 관련부서의 자문 등 지원필요여부, 유관 기관 인구문제 연구현황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위탁가능 인구사업
 - 충북 인구정책 100대 세부추진과제, 지방소멸기금대응 정책개발 및 추진
 - 충북 전담부서(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정책연구센터 업무 연계성
 - 충북 유관기관(충북연구원)의 인구문제 연구보고서 산출

□ 분석결과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위탁가능 인구사업
 - 충북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및 위탁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표 4-12] 충북 인구정책 기본조례상 정책지원가능 업무

구분	관련 조항
의견제출 /자문 등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자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탁수행	제7조(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시·군, 공공기관, 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탁수행	제8조(인구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4.7.> 1. 결혼·임신·출산·양육·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 2.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3.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구분	관련 조항
	<p>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p> <p>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p> <p>제10조(포럼 등 개최)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p>제11조(홍보·교육) 도지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1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10조에 따른 포럼 등 개최 사업 3. 제11조에 따른 홍보·교육 사업

- 충북 인구정책 100대 세부추진과제, 지방소멸기금대응 정책개발 및 추진
 - 충북도의 인구정책 100대 과제 및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개발 및 추진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컨설팅 상시적 필요
(※ 인구정책 100대 과제 주제는 제2장의 인구정책 추진실태 참조)
- 충북 전담부서(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관련 연구센터 업무 연계성
 - 충북의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인구정책담당관 역시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전문가 참여를 통한 협력작업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연구센터의 기본 업무(상시업무)의 확보가능성은 충분함³⁾

3) 여기서 기본업무(상시적 업무)란 인구문제에 대한 기본적 대응업무로 인구통계 및 관련 자료분석, 민관 인구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인구교육 등을 의미하며, 비상시적 업무는 충북도와 시군의 인구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문/컨설팅 업무로 필요시 지원하는 업무임

[표 4-13] 충북 인구전담부서(인구정책담당관) 업무의 정책지원 관련성

팀	직 명	분장사무/전문가 협업 필요사무
인구정책팀	담당관	1. 인구정책담당관 업무 총괄·조정
	행정5급	1. 인구정책팀 업무 총괄 2. 인구정책 기획 조정 3. 저출산·고령화 대책 총괄 4. 인구정책 관련 신규사업 발굴 총괄
	행정6급	1.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의회 관련업무 2. 공약사항, 지시사항, 부서현안 관리 3.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4. 인구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5.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행정6급	1. 부서성과 관리, 각종 감사자료(국회 및 중앙기관) 2. 출산육아수당 시행 3.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4. 충북인구포럼 개최 5. 태교여행 1일 프로그램 지원 6. 임신부 축하 농산물 지원사업
	행정7급	1. 출산육아수당 지원 2.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3. 다자녀 지원 사업 총괄 4. 정부합동평가 지표 관리 5.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6. 첫만남이용권 7. 인구·저출산 현황 및 지표 관리
	행정7급	1. 일반사무, 보안, 일정관리 2. 예산편성 및 일상경비 집행 3. 기록물·물품 등록 관리 4. 정부합동평가 관리 5. 주간·월간, 정부예산
소멸지역 지원팀	행정5급	1. 지방소멸대응기금 총괄 2. 인구감소지역 지원 총괄 3. 인구문제 대응 인식개선 사업 총괄
	행정6급	1.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운영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관련 업무 4.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팀	직명	분장사무/전문가 협업 필요사무
	행정7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치자람' 플랫폼 구축 2. 생명지킴이 교육사업 지원 3.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지원 4. 충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사업 지원 5. 함께육아 등 기업문화 조성 사업 6.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 인구문제 대응 도민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관리팀	행정5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지원 총괄 2. 외국인정책 기획 조정
	행정6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외국인 지원시책 개발 3. 외국인 정착 및 생활 지원 4. 고려인마을 관리 및 활성화
	행정7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실태조사 업무 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3. 외국인 관련 통계, 제도개선, 법령 정비 4. 외국인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 5. 외국인 인권증진 및 교육

○ 충북 유관기관(충북연구원)의 인구문제 연구보고서 산출

- 충북지역 인구문제 및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산출 역시 향후 (가칭)인구정책연구센터 운영사무의 지속적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아래 [표]에 의할 경우 최근 10년간(2013~2022) 충북연구원은 충북도내 인구구조 변화, 인구통계, 인구문제의 영향분석, 정책개발 등과 관련한 연구를 다양하게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수요는 인구문제 위기의 지속이나 정책사업의 추진규모를 고려할 때 장래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4-14] 충북연구원 인구관련 연구과제 수행실적(2013~2022)

유형	과제명
기본과제 기획과제 정책과제	농촌공간구조 변화동인과 정책성과 탐색을 통한 과소화 해소방안(2022) 충북 시·군의 인구구조 경쟁력 분석과 대응 방안(2022) 증평군 인구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2021) 충청북도 북부권 3개 시·군 인구 통계 분석(2021) 충북 저발전지역의 인구소멸위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21) 충북 농촌인구 증가를 위한 연구(2021) 단양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인구감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2019) 보은군 인구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2019)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 도시계획의 과제와 전략(2019) 인구환경변화에 따른 축소지향형 공간정책방향(2018) 충북지역 도시군 기본계획 계획인구의 특성 분석(2018) 인구고령화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2018) 충북지역 청년주거실태와 정책 수요조사 연구(2018) 인구기준 국가정책 개선방안(2018) 시도별 인구, 생산, 소득 간 비교 분석(2018) 청주시 인구정책 세부사업 효과성 검토(201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북의 건의사항(2017) 지방소멸시대 충북의 대응 전략과제(2017)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과 중심성 분석(2016)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2015)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201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선순환 지역발전 전략(2015) 충청북도 지역유형별 인구이동 특성(II)(2014)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농촌중심지 기능 제고방안(2014) 충청북도 지역유형별 인구이동 특성(2013)
수탁과제	단양군 인구활력계획 수립 연구용역(2022) 충북지역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정책 개발(2021) 충북 농촌인구 증가를 위한 연구(출산·양육 지원을 중심으로)(2021) 제1차 옥천군 인구정책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2021)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용역(2021) 충북 인구구조 변화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용역(2019) 농촌인구 감소대책 중점과제 발굴 연구용역(2018)

출처: 충북연구원 홈페이지 과제수행실적을 토대로 재구성.

- 현재 나타난 업무유형 이외에도 앞서 필요성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 감소 대응 행정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행정구역개편, 행정서비스 공급시스템 재편은 물론,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연구과제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이상의 검토자료 분석 결과 (가칭)인구정책연구센터 설립시 수행사무는 법령적 근거는 물론, 실제 정책사업 및 연구추진 현황, 전담부서 업무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 업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따라 수행사무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표 4-15] 타당성 분석결과 종합

	구분	주요분석자료	타당성 평가
정책 추진 일관성	(1) 상위 정책 연계	- 충북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1-2025) -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2023) 등	- 인구정책 관련 상위추진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인구정책 연구 및 인구정책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제기 - 상위정책을 통하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인구정책담당관실)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가칭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유기적 협업관계 필수적 → 상위정책 연계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매우 높음
	(2) 사업 추진 의지	- 단체장의 인구문제 의지 표명(언론보도) - 단체장 인구문제해결 의지 실천(관련 조직 및 정책) 등	- 인구정책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직접적 의지표명을 없지만,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하여 충북도정의 제1목표를 인구정책에 두고 지속적인 의지표명과 대응조치 추진 • 이와 같은 인구정책 추진은 인구문제의 특성상 계획단계부터, 진행, 평가 등 전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이 필수 - 정책의 확대와 인구문제의 연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추진에 있어 체계적/다분야적 전문가 참여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견 • 또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 추진전략 등의 승인을 통하여 인구정책연구센터 필요성에 대한 의지 유추 가능 → 사업추진 의지(단체장)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높음
	(3) 관련 사례	- 3개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자료	- 2020년 전후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적 이슈가 심화되면서 광역단체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치 움직임(광주전남연구원, 경북연구원) • 이후 인구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 증가와 함께 광역단체 주도의 연구센터 설치(부산광역시, *경기도의 경우 현재 설립 추진중)

	구분	주요분석자료	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자체설치의 경우도 지역소멸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광역단체 지원 확대를 통하여 연계 강화(경북도의 경북연구원 보조사업 확대) - 충북도의 경우도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지원기능을 선도적/적극적으로 검토, 충북도와 상시적 정책지원/협업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정책연구센터 필요 → 관련사례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매우 높음
정책 추진 안정성	법적 근거	- 관련 법령(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구정책 관련사업 및 위탁 사항 구체화 → 법적근거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매우 높음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사업 예산 (충북도 100대 세부 추진과제 시행 예산) -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2,700억원의 인구정책사업 수행 • 인구정책의 기본체계 마련, 조정, 진행과정 관리 및 성과 평가, 피드백 등 총괄적 정책지원조직 운영 필수 - 인구정책연구센터 운영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사례 연구센터 예산 (1,500만원 내외~1억 1,200만원) • 상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최대 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및 사업비 포함 시: 2억 원 내외 • 수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직(각 분야별 전문가 5~8인 규모): 컨설팅, 자문비용으로 충당 가능 → 예산사용 및 확보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 높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명시 사업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 3개 유사사례 인구연구센터 수행사무 - 충북연구원 인구관련 연구수행과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명시사업과 함께 단기/중장기적으로 수행 필요한 인구정책 연구사업 확대 불가피 • 인구정책 관련 사무 지속 확대 •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업무과부화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및 직접/협업수행체계 명확화 필요 → 사무적 측면에서 타당성 매우 높음

제5장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의 설치 및 활용방안

제1절 설치방향

제2절 설치방안

제3절 활용방안

- 충북인구센터 설립을 위한 단기적 대안의 구체화 방안 마련
- 중장기적 충청권 인구연구기관 설립의 방향 모색

제1절 설치방향

-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의 설립은 앞서 논의를 토대로 3가지 측면에서 검토 가능함
 - 첫째, 제1안(위탁 설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설치
 - 둘째, 제2안(관련기관 자체설치 협조의뢰): 충청도 유관 전문기관에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자체 설치를 협조 의뢰
 - 셋째, 제3안(직접 설립): 인구관련 연구센터를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 방향(1): 단기적 or 중장기적 검토대안
 - 위에서 상정한 3가지 검토가능 대안중 제1안(위탁 설치)와 제2안(관련기관 자체설치 협조의뢰)은 별도의 근거 규정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작업, 과도한 비용투입 없이 단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비교 대안으로 검토함
 - 다만 제3안(직접 설립)의 경우 업무, 예산 및 인력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
 - ▶ 이는 별도 재단 형식의 설립 시 임시적 성격의 위탁 조직과 달리 별도의 설립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 업무량 분석을 통한 사무, 조직구성원은 물론 인건비 및 조직운영비를 포함한 예산편성 등 사전적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 특히 초기 시행착오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특히 관련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에 의한 인큐베이팅

기간을 거쳐 별도의 연구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1, 2안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3안의 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제3안의 경우에는 설립의 방향성과 주요 수행역할, 검토사항 등에 한정하여 대안을 제시함

○ 방향(2): 단기적 대안간 검토대안 비교

- 단기적 검토대안인 제1안과 제2안의 경우 우선 각각 과정적 측면에서 설치 근거와 설치절차,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수행업무, 조직 및 인력운영, 예산 조치, 기타 고려사항을 검토·제시함
- 다음 제1안과 제2안 간 장단점에 대한 비교검토를 위하여 앞서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된 인구관련 연구센터 설립 시 필수적인 역할에 대한 충족가능성 측면을 비교·검토함

[표 5-1] 인구연구센터 설치시 필수역할 검토사항

역할구분	비교검토사항	기타
학제적접근	- 센터의 운영직원의 인구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팀 구성이 가능한가?	- 단기: 겸직/비상시적 팀 형태 - 중장기: 상근/상시적 조직
정책플랫폼	- 민관 인구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역할이 가능한가? - 인구문제 및 정책개발에 대한 참여, 교육, 컨설팅 등이 가능한가?	- 인구문제대응 민관네트워크 구축, 정책개발 민간참여 유도, 인구교육 등
데이터관리	- 정책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데이터 운영의 체계적 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정적 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이 가능한가? - 관련 정책자료의 활용(피드백) 및 축적,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가?	- 충북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데이터, 관련자료의 체계적 산출, 안정적 관리/활용, 관련단체 제공 등
상시적협력	- 충북도/시군의 관련 계획수립,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상시적 협력관계가 가능한가?	- 인구정책관련 자문/컨설팅 등

제2절 설치방안

1. 단기적 설치방안

1) 위탁설치방안

가. 법적근거

- 현 충북의 인구정책 기본조례 근거규정을 의거하여 설치 가능하며, 때문에 설치 근거를 위한 별도의 관련 규정 제/개정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9조

【표 5-2】 위탁설치 근거규정(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10조에 따른 포럼 등 개최 사업
3. 제11조에 따른 홍보·교육 사업

나. 설치절차

- 충청도의회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절차 추진
 - 민간위탁 시 인구정책 연구센터의 역할 등 필수적 검토
 - (※ 아래 기타 고려사항 참조)

다. 역할 및 수행기능

① 역할

- 충청도 인구정책 추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과정적 지원체계 구축
- 지역단위 인구정책연구를 위한 토대 마련 및 네트워크 활성화

② 수행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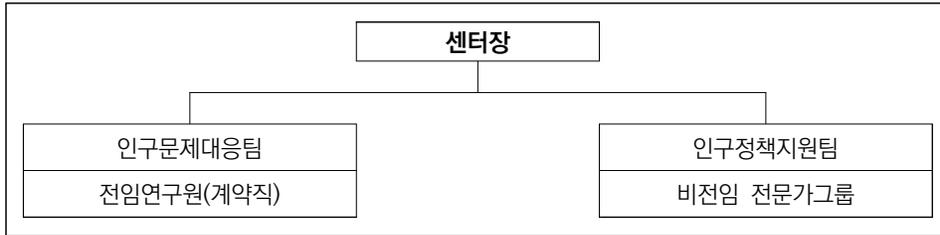
- 수행기능은 핵심수행기능인 '과중심 인구정책 관리시스템 구축' 기타 일상적 수행기능, 향후 검토가능한 기능으로 구분
- 성과중심 인구정책 관리시스템 구축
 - 인구정책 사업개발 및 관리의 기본틀 마련
 - ▶ 인구정책 사업개발의 기준
 - ▶ 인구정책 추진사업의 과정관리 및 중간점검
 - ▶ 인구정책 추진사업의 성과평가 및 피드백 등
 - 인구정책 추진사업의 성과공유
 - ▶ 인구정책 추진사업의 성과공유 및 확산 방안
 - ▶ 타시도 유사 인구정책과의 비교분석(강점 강화/보완과제 도출)
 - 인구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반영
 - ▶ 정기적 도민의견 수렴방안 마련(온라인/오프라인)
 - ▶ 인구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현 추진사업에 대한 보완의견 등
- 기타 도 인구정책 추진 지원
 - 도 인구계획 및 정책수립 지원
 - 인구정책협의회(도/시군/관련단체) 운영
 - 인구관련 조사·연구 사업(쟁점 현안분석, 통계조사, 정책적 연계 등)
 - 인구관련 홍보·교육 사업
 - 인구관련 포럼, 학술대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지역소멸대응 등 현안과제(도/시군) 컨설팅업무 대응/협업팀 지원
- 향후 검토기능
 - 인구관련 정책연구과제 수행(인구문제/정책의 선도적 연구과제 추진)
 - 인구영향평가 등

라. 조직 및 인력구성

- 초기 단계에서는 센터장 아래 두 개의 팀(전임팀, 비전임팀) 구성

-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근조직인 ‘인구문제대응팀’과 비상근조직인 ‘인구정책지원팀’으로 구성

[그림 5-1]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조직(안): 위탁설치



[표 5-3]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분장업무 및 인력구성(안)

		인구문제 조사연구사업	인구문제 네트워크사업	
인구 연구 센터	센터장	- 조사연구 책임수행 - 조사연구 결과보고/협의 (충북도) - 지역소멸대응 협업팀 총괄	- 언론인터뷰, 교육강의 - 학술대회 등 발표/토론	▶ 센터장 1인 ▶ 센터 내부운영 총괄 및 외부대응
		1인(책임연구원급)		
	센터원 (인구 문제 대응팀)	- 조사/연구 지원업무 - 지역소멸대응 협업팀 운영 지원(시군연계 등)	- 홍보/교육 자료수집/작성/교육추진 - 포럼/학술대회 준비/운영 - 인구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각 사업분야를 연구원 1인이 주관(상근)하되, 필요시 상호지원
		1인(연구원급)	1인(연구원급)	
협업 구성원 (인구 정책 지원팀)	- 지역소멸대응 현안과제 자문/컨설팅 - 조사연구 수행규모에 따라 연구진 참여	- 필요시 전공분야 관련하여 지원	▶ 비상근(겸직) ▶ 인구연구센터에서 자체 구성	
	자문/컨설팅 업무량/전공분야에 따라 5인 내외 규모			

마. 예산조치

- 예산은 위탁시 요구되는 계약비용으로 인건비와 사업추진비로 나눌 수 있음
 - 인건비의 경우 상근계약직 채용에 소요되며, 연구직(석사급) 2~3인 채용시 1억원~1억5천만원 내외(부산인구영향평가센터 상근연구직 기준)

- 운영비는 학술대회 개최, 인구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2~3천만원 내외 예상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센터 기준)
- 이외 추가적 업무소요비용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연간 2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바. 기타 고려사항

-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위탁방식을 추진할 경우 위탁설치가 가능한 기관은 충북도의 유관 공공연구기관, 관내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임
 - 이들 기관의 경우 모두 법적으로 위탁이 가능함
 - 다만 앞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위탁기관 선정시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필수역할 (학제적 접근이 가능한가? 정책플랫폼 역할수행이 가능한가? 안정적/체계적인 인구자료관리가 가능한가? 충북도와의 상시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가능한가?), 즉 연구센터운영의 실질적 내용기준을 충족하는가의 여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2) 자체설치방안

가. 법적근거

- 별도의 근거규정 필요없음

나. 설립절차

- 공식적인 설립절차 없음
 - 단 설치를 위한 협조의뢰와 관련하여 비공식적 협의과정 필요

다. 역할 및 수행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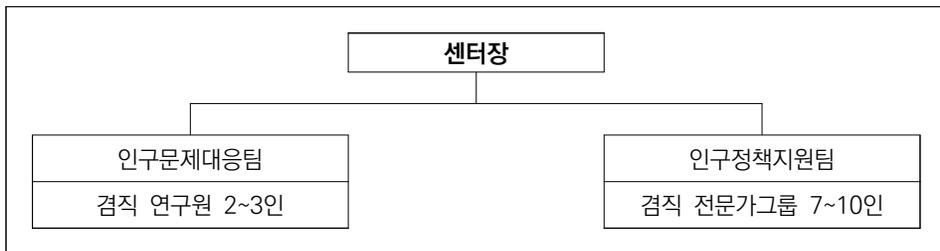
- 역할과 기능은 기본적으로 위탁설치방식의 내용과 동일
(※ 앞서 제시된 위탁설치방식에서의 역할 및 기능 참조)

- 다만 기능수행의 범위는 조례 명시사항중 자체설치 기관에서 수용가능한 기능범위에 한정
- 역할과 기능수행범위가 자체설치 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기능수행의 안정성 및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한계요인이 존재함

라. 조직 및 인력구성

- 조직구성 역시 앞서 제시된 위탁설치방식의 내용과 동일
 - 센터장 아래 두 개의 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 인력운영상 ‘인구문제대응팀’의 전임직화 여부는 관련 예산 부재상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않고, 때문에 ‘인구문제대응팀’과 ‘인구정책지원팀’ 모두 겸직으로 구성
 - 두 팀의 기본적인 업무분장은 위탁방식과 차이가 없지만, 위의 기능수행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문제대응팀’의 팀분장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성 확보는 전적으로 자체설치기관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한계요인이 존재함

[그림 5-2]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조직(안): 자체설치



마.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바. 기타 고려사항

- 자체설치방안은 비예산 설치방식으로 유관 공공기관 이외의 대학이나 민간연구 조직에서의 자체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때문에 자체설치가 가능한 기관은 공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연구기관에 한정
 -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체설치기관 전체지원 예산 증액, 관련 연구프로젝트 수행 등 간접적 예산보조방안 검토 필요

3) 단기적 대안비교

- 단기적 대안인 위탁설치방식과 자체설치방식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이 비교 가능함

[표 5-4] 단기적 대안간 설립과정, 조직관리 비교

		위탁설치방안	자체설치방안	비고
설립 과정	법적 근거	현 조례 근거	-	
	설립 절차	의회 심의 민간위탁 절차	-	
조직 운영	역할 / 기능	(역할) - 충북도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지원 - 충북도 인구관련 데이터 허브 및 민관네트워크 구축·관리 (기능) - 출산/육아, 인구유입 등 인구 증가 사업 - 정주여건 개선사업 -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 인구관련 포럼 운영 - 인구관련 홍보·교육 사업 등	동일	계약비용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조정

		위탁설치방안	자체설치방안	비고
조직 / 인력		센터장 아래 2개 팀 구성 - 인구문제대응팀 - 인구정책지원팀	동일	자체설치의 경우 도 관련 보조사업 (용역) 수행시 전임직 확보 가능
		- 인구정책대응팀: 계약직(상근) - 인구정책지원팀: 겸직(비상근)	- 인구정책대응팀: 겸직 - 인구정책지원팀: 겸직(비상근)	
예산 조치		위탁비용 (※ 위탁비용은 인건비 + 위탁사업 운영비)	별도 없음 (※ 관련 보조사업(용역) 계약을 통하여 간접적 지원 검토 필요)	
기타 (설치가능기관)		공공연구기관 대학/민간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의 필수역할 수행여부는 다음과 같이 대안간 비교
가능함

[표 5-5] 단기적 대안간 필수적 수행역할 장단점 비교

	위탁설치(제1안)		자체설치(제2안)
	1-a (공공연구기관)	1-b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학제적접근	-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구성원 확보(겸직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 부담없이 겸직구성원간 강한 연계성 확보 가능)	- 대학의 경우 학제적 연구를 위한 구성원 확보 가능(겸직 활동에 대한 비용부담 발생, 겸직구성원간 연계성은 상대 적으로 제한적) - 민간연구기관의 경우 구성원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 특성	- 학제적 연구가 가능한 구성원 확보(겸직활동에 대한 비용지급 부담없이 겸직구성원간 강한 연계성 확보 가능)
정책플랫폼	- 운영가능(예산범위내)	- 운영가능(예산범위내)	- 민관네트워크, 정책민간 참여 일정부분 가능 (예산확보 문제 등)
데이터관리	- 체계적인 데이터 생산, 데이터 및 자료의 관리 가능 (관련 연구의 축적,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용이)	- 체계적 데이터 생산, 자료관리 상대적 제한(관련 연구 단편적, 조직규모상 데이터/자료의 체계적/안정관 관리, 활용 제한적)	- 체계적 데이터관리의 책임성 상대적 저하 (상근구성원 부재, 데이터 생산, 자료관리 등 업무 부여 불가)

	위탁설치(제1안)		자체설치(제2안)
	1-a (공공연구기관)	1-b (대학, 민간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상시적협력	- 상시적 협력 상대적 우위(충북도는 업무부여 및 비용부담 위치, 공적 업무관계 유지 하면서 업무 융통적 운영 가능) - 상근직원에 의한 즉시적 대응(자문의뢰기관과 전문가 연계), 해당 전문가 부재 시 대안 모색 제공 등	- 상시적 협력 상대적으로 제한(충북도는 업무부여 및 비용 부담으로 공적 업무관계를 가지지만, 계약범위내 한정적) - 상근직원에 의한 즉시적 대응(자문의뢰기관과 전문가 연계), 해당 전문가 부재 시 대안모색 제공 등	- 상시적 협력 상대적으로 제한(공공연구기관 자체설치로 충북도는 협조 의뢰 위치)

2. 중장기적 설치방향

○ 방향검토 전제

- 중장기적 인구관련 연구조직은 기존의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의 역할에 미래적 수행역할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며, 이 경우 (가칭)충북인구연구원(재단법인) 설립 추진 검토
- 나아가 장기적으로 지역적 연계특성을 가지고 있는 충청권 통합 인구연구 조직 구상도 검토, 이 경우 (가칭)충청권인구연구원(조합) 검토

○ 수행역할 및 조직구성 방향

- 전자의 경우 현재 수행 역할 이외에 미래적 과제(예컨대 인구감소에 대한 시군단위 행정구역 개편, 인구감소지역 행정서비스 공급시스템 재편 등 행정의 근본적 대응시스템 변화 연구, 인구영향평가 등 인구정책관련 새로운 제도 도입/운영 등)를 포함하며, 조직구성 역시 각 분야별 전임 정책지원/연구팀을 구성
- 후자의 경우 앞서의 (가칭)충북인구연구원의 주요 수행역할을 포함하여(참여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동일 수행역할 포함), 충청권 공동의 인구문제대응 및 정책지원, 충청권 인구연구허브 구축 및 충청권 인구문제와 공동의 산업경제 대응전략 등 업무수행범위의 확대를 모색하며, 이 경우 조직구성은 참여 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 형식 검토 가능

제3절 활용방안

-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의 활용방안은 앞서 논의된 수행기능과 기존 인구관련 연구센터의 활동현황 검토를 통하여 모색 가능
 - 인구연구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는 이해관계자와 인구연구센터 간 수요-공급의 관계에서 모색가능한데, 크게 인구연구센터-도/시군 관계에서의 활용, 인구연구센터-도민 관계에서의 활용, 인구연구센터-전문가/시민집단 관계에서의 활용으로 구분
 - 첫째, 인구연구센터-도/시군 관계에서의 활용은 도/시군의 정책지원수요와 인구연구센터가 전문가적 역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 둘째, 인구연구센터-도민 관계에서의 활용은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홍보 매체와 직접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민의 관심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인구정책 참여제고에 활용하며
 - 셋째, 인구연구센터-전문가/시민집단 관계에서의 활용은 전문가 및 여론 선도층과의 전문가적 공감대 구축을 통하여 정책수행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가능함

[표 5-6] 관계적 측면에서의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활용방안

구분	활용방안	
센터-도/시군 관계에서의 활용	▶ 정책지원역할	- 도 인구계획 및 인구정책 수립 지원
	▶ 인구문제인식, 인구사업 개발의 기본틀 개발 및 확산 역할	- 인구문제, 인구사업개발에 대한 기본틀 개발 - (가칭)인구정책협의회(도/시군의 인구계획/인구사업 관련부서 팀장급 이상) 구성 및 정기적 워크숍을 주관 하여 관련 공무원간 문제인식 및 사업개발방향의 공감대 형성
	▶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적 자문-컨설팅 역할	- 인구연구센터내 인구정책지원팀(전문가협업팀) 구성을 통하여 도/시군의 인구사업 관련부서의 현안 문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컨설팅 제공
센터-도민 관계에서의 활용	▶ 인구문제/정책의 홍보 역할	- 언론 인터뷰(충북도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 제공, 인구쟁점 전문가 의견 등)를 통하여 도민의 인구문제 관심 지속적 제고 - 인구문제 및 정책대응 홍보자료 제작
	▶ 인구문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역할	- 초중등학교 특별교육(교육청 협업), 대학생 교양강좌 특강(관내 대학 협업) - 인구문제대응 시민강좌 개설
센터-전문가/ 시민집단 관계에서의 활용	▶ 인구문제에 대한 쟁점 선도 역할	- 인구관련 포럼 운영을 통하여 선도적 쟁점 개발 및 대응 - 인구관련 학술대회, 워크숍 등의 주관 및 참여를 통해 인구문제 관련 쟁점의 논의, 충북도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논의 및 피드백 등
	▶ 충북도 인구관련 연구 데이터 허브 역할	- 충북도 인구특성을 반영한 인구지표 개발 - 관련 통계, 정책자료, 해외사례 등의 수집 및 제공 - 인구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a).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b).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광용. (2022). 인구감소, 지역 중심의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대응. KDI경제정보센터. 2022년 4월호.
- 김하나, 고우림, 임예진, 정명구, & 조영태. (2020). 지방인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인구학. 제43권 제4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2.12.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 정성호. (2018).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공사회연구. 8(2).
- 주상현. (2021). 지방자치단체 인구소멸 실태와 정책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5권 제3호.
- 최경화, 박경, & 정숙정. (2021). 경상북도 인구구조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패러다임 모색. 대구경북연구. vol.20. no.3. 통권 34호.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인구정책담당관. (2023). 민선8기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전략.
-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2022.9.29.)
- 통계청. (2023).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보도자료(2023.1.30.)
- 통계청. (2023).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자료(2023.2.2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6.
- 한국은행충북본부. (2022). 충북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22.1.25.)

부 록

[부록1]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5.] [부산광역시조례 제6420호, 2021. 7.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 실현으로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계획·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지역의 인구구조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인구변화에 따른 영향 및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행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출생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영향평가 주체) ① 시장은 인구정책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지원
2. 인구영향평가 대상 공모
3.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 모니터링
4. 인구영향평가센터 관리·감독
5.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구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영향평가 실시
2.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공모(유관기관 및 구·군 의뢰과제를 포함한다)
3.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발주 및 관리
4. 인구영향평가 관련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인구영향평가 관련 외부기관 협업
6. 인구영향평가 수행결과 보고
7. 센터 운영실적 보고
8.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평가방법) ①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의 계획 및 실시 전에 인구영향평가자가진단서(이하 “자가진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와 인구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전문가 또는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10조(인구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결과가 인구정책에 반영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 시장은 인구영향평가 추진실적과 정책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구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원칙적으로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항
2. 공개로 인하여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예측하지 못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사항
3.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14조(인구영향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
2. 인구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인구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록2]**(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운영규칙(안)****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부설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연구원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광주/전남 인구정책 및 통계 수집/분석/공유
2. 광주/전남 인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3. 인구정책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컨설팅/모니터링
4. 중앙정부와의 제도개선 등 광주/전남 제안 발굴
5. 기타 인구정책 평가 및 관련 연구 수행

제2장

제4조(구성) ① 연구센터는 센터장, 간사 및 직원 등 운영인력을 두며 원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센터는 인구정책연구팀과 지자체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인구정책협업회의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5조(인구정책연구팀) ① 연구센터의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구분야 연구자로 구성된 인구정책연구팀(이하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연구팀은 센터가 소속된 연구실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팀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③ 연구팀은 정기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센터장이 개최한다.

[부록3]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10.] [경상북도조례 제4809호, 2023. 4.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인구감소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인구증감과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간 효율적 연계와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와 도 및 도내 시군 간 협약에 관한 사항
5. 도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내 시·군 간 생활권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7.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
 9.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의 추진과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활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보육·교육·보건·의료·안전·교통·주거·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사회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생활환경·경관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전에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